

배 정 호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www.kinu.or.kr



배 정 호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인 쇄 2007년 12월 24일
발 행 2007년 12월 28일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동북아연구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900-4300
(직통) 02)901-2527
(팩시밀리) 02)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도서출판 늘품 (02 2275-5326)

인 쇄 처 양 동 (02 2272-1767)

가 격 ₩6,000

© 통일연구원, 200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 배정호. -- 서울
: 통일연구원, 2007
p. ; cm. -- (연구총서 ; 07-13)

참고문헌수록
ISBN 978-89-8479-424-5 93340 : ₩6,000

340.913-KDC4
320.952-DDC21

CIP2007004062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I. 문제제기	1
II. 고이즈미 정권의 개혁정치와 평가	7
1. 정치변동과 고이즈미 정권의 등장	9
2. 개혁정치의 추진과 당내 갈등	13
3. 2003년의 11·9 총선과 양대 정당 구도의 형성	16
4. 보수적 정치공간의 개혁화 지향과 고이즈미 총리의 개혁 정국 주도력 강화	18
5. 고이즈미 총리의 리더십과 개혁정치에 대한 평가	24
III. 2006년 9·20 자민당 총재선거의 주요 정책쟁점과 전개과정	27
1. 자민당 총재선거의 주요 정책쟁점	29
2. 9·20 자민당 총재 선거의 정치적 변수와 전개과정	39

IV. 아베정권과 국내정치	51
1. 아베정권의 등장	53
2.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의 특징	57
3. 7·29 참의원 선거와 자민당의 대참패	68
4. 아베 총리의 퇴진	77
V. 아베정권의 대외전략노선과 대북전략	83
1. 아베정권의 대외전략 노선	85
2. 아베정권의 대북전략과 북·일관계	99
VI. 결론	119
참고문헌	123
최근 발간자료 안내	126

표목차

<표 II-1> 고이즈미 후보의 득표	11
<표 II-2> 자민당 파벌 상황(2001년도)	14
<표 II-3> 개혁대상(기득권 세력)과 자민당(2001년도)	15
<표 II-4> 2004년 7·11 참의원 선거의 결과	20
<표 II-5> 2005년 9·11 중의원 총선의 결과	23
<표 III-1> 주일미군 재배치·재편의 주요 로드맵	35
<표 III-2> 아베 신조와 후쿠다 야스오의 유·불리 예상 상황 전개 비교	49
<표 IV-1> 9·20 자민당 총재선거와 아베 신조의 득표력	53
<표 IV-2> 자민당 3역 인사	54
<표 IV-3> 아베 내각의 각료 명단	56
<표 IV-4> 개정된 교육기본법의 핵심부분	59
<표 IV-5> 『국민투표법』의 주요 내용	65
<표 IV-6> 참의원 선거 방식	69
<표 IV-7> 아베내각의 지지율의 변화	70
<표 IV-8> 7·29 참의원 선거와 참의원 의석 분포	72

○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표 IV-9> 7·29 참의원 선거와 자민 대 민주의 대결 결과	73
<표 IV-10> 아베정권의 정치 스캔들	74
<표 IV-11> 아베 총리와 오자와 대표의 리더십 평가	76
<표 IV-12> 일본 중의원 의석 분포(2007. 8월 시점)	78
<표 IV-13> 자민당 3역 인사	79
<표 IV-14> 아베 개조내각의 각료 명단	80
<표 V-1>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의 주요 내용	90
<표 V-2> 미국·일본·호주의 전략적 입장	94
<표 V-3>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의 주요 요지	96
<표 V-4> 일본의 독자적 대북 제재조치의 주요 내용	104
<표 V-5>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담의 입장차	110

그림목차

<그림 IV-1> 자민당 내 파벌 역학 관계도	67
<그림 V-1> 자유와 번영의 호(弧)	86
<그림 V-2> 납치문제 대책 본부 조직도	100

I

문제제기



2001년 4월 ‘일본개혁, 자민당개혁’을 기치로 등장하였던 고이즈미 전 총리가 2006년 9월에 퇴진하고, 아베 총리 및 내각이 등장하였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재임기간 중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개혁 정치를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받지만,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동아시아 외교의 부재 등 적지 않은 문제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포스트 고이즈미를 향한 경선에서 동아시아 외교 문제는 격차사회의 문제와 함께 핵심적인 정책쟁점으로 부각되었고, 9·20 자민당 총재 선거에 대해 한국, 미국, 중국 등의 언론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아베 신조 대 후쿠다 야스오’의 대결 양상이 전개되는 가운데 당시 고이즈미 총리는 ‘후계자로서 개혁노선을 계승할 인물이 바람직하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아베 신조를 지원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의 유력지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아베 신조 관방장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을 은근히 지원하였다.

그러나 2006년 7·5 북한의 미사일 발사사건을 계기로 일본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고조되면서, 자민당 총재 경선은 ‘아베 대망론’으로 전개되었다.

아베 신조는 일본판 강한 북풍을 타고 첫 전후 세대의 총재·총리로 등장하였다. 고이즈미 전 총리의 후원과 일본판 북풍의 결정적 영향에 힘입어 등장한 아베 총리는 전후체제의 탈피를 위한 개혁정치를 전개하였고,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아베정권의 성향은 한국, 중국 등에게도 매우 중요하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미국 등 서구의 일본 전문가들

I
II
III
IV
V
VI

이 지난 일본의 10년간을 재평가하며, 소위 ‘일본 부활’에 대한 연구서들을 출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고이즈미 정권의 개혁정치에 대한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에 관한 연구는 매우 의의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본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5년 5개월 집권한 고이즈미 내각의 개혁정치에 관한 분석·평가와 함께 아베정권의 개혁정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에 관해 분석한다.

본서의 제Ⅱ장에서 고이즈미 정권의 개혁정치에 관해 분석·평가하였다. 즉, 정치변동속의 고이즈미 정권의 등장, 개혁정치의 추진과 당내 갈등, 양대 정당구도의 형성, 보수적 정치공간의 개혁화 성향 등에 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이즈미 총리의 리더십과 개혁정치에 대해 심도 있는 평가를 한다.

제Ⅲ장에서 9·20 자민당 선거의 쟁점 정책과 전개과정에 관해 분석한다. 자민당 총재선거의 주요 쟁점인 동아시아 외교문제, 야스쿠니 신사 문제, 주일미군의 재편과 기지·비용문제, 격차사회 문제, 재정재건과 소비세 인상 등에 관해 분석하고, 나아가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의 부상과 정국 영향, 모리 파벌의 영향력, 고이즈미 칠드런과 고이즈미 총리의 영향력, 등을 자민당 총재 선거의 정치적 변수로 인식하여 9·20 자민당 총재 선거의 전개과정에 대해 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의 특징, 7·29 참의원 선거와 아베정권의 퇴진 등에 관해 분석한다. 특히 전후체제 탈피노선에 따른 교육기본법의 개정, 방위성 승격, 집단자위권 용인을 위한 연구자문그룹의 발족, 헌법개정을 지향한 국민투표법의 마련 등 개혁정치를 중심으로 아베정권의 특징을 분석한 뒤, 7·29 참의원 선거와 자민당의 대참패, 참의원 선거의 대참패의 후유증에 따른 아베정권의 퇴

진 등에 관해 분석한다.

제V장에서는 동아시아 외교 등 후유증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소하여 나가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아베 내각의 대외정책노선에 관해 분석하며, 나아가 대북정책 및 북·일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즉, 제V장에서는 『자유와 번영의 호(自由と繁榮の弧)』 구상, 동아시아외교의 전개, 일본·호주 안보협력 강화 등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아베정권의 대외정책 노선에 관해 연구하고, 나아가 아베정권의 대북전략 노선,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아베정권의 대북제재, 2·13합의 이후의 일본의 대북전략 및 북·일관계 등에 관해 분석한다.

I

II

III

IV

V

VI

II

고이즈미 정권의 개혁정치와 평가



1. 정치변동과 고이즈미 정권의 등장

2000년 4월 오부치 게이쥬(小淵惠三) 총리의 뇌경색으로 인한 병세가 극히 위중하여 회복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모리 내각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는 취임 초기부터 실언에 따른 자질론 시비를 야기하였고, 이는 정권의 구심력 약화 및 지지율 침하로 귀결되었다.¹ 게다가, 미국의 핵잠수함과 일본의 실습선 충돌사건의 불성실한 대응태도에 대한 국민비판, 장기적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모리 연립내각은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7%대로 급락함과 더불어 국정운영의 한계를 나타내었다.²

따라서 2001년 3월 13일의 자민당 전당대회를 전후하여 모리 요시로 총리의 퇴진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모리 총리는 3·13 제67차 자민당 전당대회에서 사임의사를 나타낸 뒤, 4월 6일에 총리 사임을 표명하였다.

이에 자민당은 ‘4·24 신임 당총재 선출’라는 선거고시를 하였고, 각 파벌 및 총재 후보들은 후임총리를 둘러싼 권력게임을 전개하였다.

자민당 총재선거는 중·참의원 소속 국회의원(1인 1표) 및 당원들(1만명당 1표)에 이루어지나, 총재가 임기(2년) 만료전에 사퇴했을 경우에는 중·참 양원의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과 47개 도도부현(都

¹ ‘천황중심의 신의 나라(神國)’, ‘피랍(被拉) 일본인의 제3국 발견’ 등 잦은 실언은 야당의 정치적 공세와 함께 모리 총리의 자질론 시비를 초래하였고, 자민당 의원의 수뢰 사건 및 외무성 간부의 공금횡령 사건 등은 정권의 구심력을 약화시켰다.

² 2001년 3월 5일 야당인 민주·자유·공산당 등 4당은 ‘모리내각 불신임’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야당의 ‘모리내각 불신임’안은 여당인 자민·공명·보수당 등 3당의 반대로 부결되었지만(반대 274, 찬성 192), 야당의 ‘모리내각 불신임’안과는 별개로 여권 내에서도 총리퇴진 운동이 전개되었다.

道府縣)의 대표들에 의해 치러졌다. 즉, 2001년 4월 24일의 총재선거는 임기만료전의 선거이므로, 선거인단이 국회의원과 도도부현(都道府縣) 지부의 대표들에 의해 구성되는 선거로 치러지게 되었다.

자민당은 폭넓은 출마기회 부여 및 당원들의 의사 반영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천 의원의 수의 감축(30명→20명)과 더불어 도도부현(都道府縣) 지부의 표를 확대(1표→3표)하였고, 대다수의 지부는 밀실정치의 이미지를 타파하기 위해 예비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선거에서 1위 득표를 한 후보에게는 지부 할당표인 3표 모두를 지지해 주는 선거방식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4월 19~23일에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지부의 예비선거를 거친 뒤, 24일 자민당 본부에서 소속 국회의원(346명) 및 각 지부 대표(141명) 등 총 487명의 선거인단이 참석하는 선거를 통하여 총재가 선출되게 되었다.

2001년 4월 12일 실시된 총재후보 등록에는, 총리직에 재도전하는 하시모토 류타로 전 총리, ‘파벌 파괴’를 선언한 개혁성향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후생상, 가메이 시즈카 정무조사회장, 아소 다로 경제재정상 등 4명이 입후보하였는데, 이 중 최대파벌의 회장으로서는 제3파벌인 ‘호리우치’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하시모토 전 총리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밀실·담합 정치에 대한 비판 및 개혁 요구, 연립내각에 대한 지지도의 저하와 그에 따른 7월 29일 참의원 선거에 대한 당원들의 불안 등의 영향으로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타났다.

개혁성향의 정치인으로서 하시모토 전 총리보다 상대적으로 국민적 인기가 높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후보가 각 지부의 예비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압승을 거둬 123표의 지방표를 확보하였고, 자민당

소속 중·참의원 선거에서도 상대적으로 약한 당내 권력기반에도 불구하고 하시모토 후보보다 35표를 더 획득하여 제20대 총재로서 당선되었다(<표 II-1>참조).

그리고 고이즈미 신임 자민당 총재는 자민-공명-보수 3당의 지원 아래 4월 26일 중·참의원의 총리 지명선거에서 제87대 총리에 선출된 뒤, 개혁추진을 위하여 ‘탈파벌’형 내각을 조직하였다.

<표 II-1> 고이즈미 후보의 득표

후 보	지방표 (47개 都道府縣, 각 3표, 총 141표)	중앙표 (중·참의원 346표)	합 계 (487표 중 무효 3표)
고이즈미 준이치로	123표 (41개 지역서 1위)	175표	298표
하시모토 류타로	15표 (5개 지역서 1위)	140표	155표
가메이 시즈카	3표 (1개 지역서 1위)	지방 예비선거 후 기권	
아소 다로	0표	31표	31표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자민당 총재 당선배경 및 고이즈미 내각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³⁾

첫째, 1993년 7·18 총선이후, 자민당 장기정권의 붕괴와 더불어 등장한 비(非)자민 연립정권의 국정운영능력에 불만을 느낀 일본 국민들은 21세기의 일본의 장래를 위해 자민당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

3- 배경호, 『탈냉전시대 전환기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5), II장.

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자민당 역시 제도적 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민당의 개혁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 국민들의 정치적 민의는 자민당 총재선거에 반영되었고, 따라서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일본 개혁·자민당 개혁’을 기치로 내건 고이즈미 후보가 당내 권력기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것이다. 일본의 유력지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고이즈미 후보가 지방 예비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데 대해 ‘고이즈미 혁명’이라고 특징지었다.⁴

둘째, ‘파벌 파괴’선언과 더불어 모리파를 탈퇴한 고이즈미 후보는 비주류로서 소수세력인 ‘야마자키’·‘가토파’ 등의 지원을 받으며, 자민당 제1파벌 및 제2파벌의 지원을 받는 하시모토 후보에 대항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즉, 고이즈미 후보는 당내 ‘파벌역학 구도의 재편’ 및 ‘파벌을 바탕으로 한 권력게임의 타파’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서 총재로 당선된 것이다. 따라서 당내 일부에서는 7월의 참의원 선거를 위해 하시모토 파벌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당·정 인사에서 ‘탈파벌의 인사’를 추구하였다.⁵

셋째, 고이즈미 총리의 임기는 모리 총리의 잔여임기이므로, 5~9월까지의 5개월이고, 고이즈미 연립내각의 정치적 생명은 7월의 참의원의 결과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한부적인 것이었

4. 『朝日新聞』, 2001年 4月 23日.

5. 예컨대, 고이즈미 총리는 당 운영에 있어서 거대 파벌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파벌역학 구도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소수파벌 출신의 야마자키 다쿠와 아소 다로를 각각 간사장 및 정무조사회장에 임명하였고, 제2파벌 회장인 호리우치 미즈오를 총무회장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내각 구성은 개혁추진을 위해 파벌·당선횟수보다 능력 등을 중시한 ‘탈파벌형 인사’를 단행하였다. 즉, 당내 제1의 파벌인 하시모토 파벌은 비주류로 전략함과 동시에 당·정 인사에서도 결과적으로 배제되었다.

다. 그러나 고이즈미 연립내각은 내각발족 직후,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역대 내각 중 최고의 지지율을 나타내었다.⁶

이와 같은 5개월 잔여임기의 고이즈미 연립내각은 2001년의 7·29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대승을 거두도록 하였다. 개혁을 기치로 등장한 고이즈미 총리는 국민들의 높은 개인적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경제·행정·사회 전분야에서의 ‘성역없는 구조개혁’을 외치면서 참의원 선거를 지휘하였고, 그 결과 자민당은 121석⁷ 가운데 64석을 확보하였으며, 연립여당은 78석을 획득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연립여당은 참의원 총의석수(247석)의 과반수를 훨씬 웃도는 138석의 확보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둔 대가로 고이즈미 총리는 동년 8월 10일 중·참의원의 의원총회에서 투표없이 임기 2년의 총재로 재선되었다. 즉, 고이즈미 총리는 자신의 인기를 지렛대로 7·29 참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끌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한층 강화하게 되었고,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2. 개혁정치의 추진과 당내 갈등

자민당 총재에 재선되어 정치적 입지가 강화된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 8월 13일 공식·개인 자격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야스

6. 고이즈미 내각의 취임 3주째를 맞이하여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고이즈미 내각은 일본의 방송·신문의 조사 모두에서 80% 이상의 지지도를 나타내었고, 한 일본 방송 조사에서는 91%까지 나타났다. 『중앙일보』, 2001년 5월 17일.

7. 일본의 참의원은 중선거구·비례대표제에 따라 임기 6년의 의원을 3년마다 정원(252명)의 1/2씩 개선하는데, 2001년 7·29 참의원 선거는 2004년까지 정원 10명 감축 방침(2001년 247명→2004년 242명)에 따라 121명(지역구 73명, 비례구 48명)을 선출하는 선거였다.

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였고, 국민들의 높은 지지도를 기반으로 '성역없는 개혁'정치를 추진하였으며, 중의원 보궐선거(10.28)의 승리 및 자민당 단독 과반수(241/480)의 확보에 따른 위상 강화 등을 바탕으로 정국을 주도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이즈미 총리의 구조개혁 추진 및 정국주도는 자민당내 비주류의 적지 않은 반발을 초래하였다. 2001년의 자민당내 파벌 상황은 <표 II-2>과 같았는데, 4·24 총재선거를 계기로 고이즈미 총리의 전 소속파벌인 모리파를 비롯하여 고이즈미 총리의 당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던 야마자키파, 가토파가 주류에 편입된 반면, 고이즈미와 경선하였던 하시모토파 및 가메이파, 하시모토 전 총리를 지지하였던 고노파, 고모토파 등이 비주류로 전락되면서 당내 대립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표 II-2> 자민당 파벌 상황(2001년도)

하시모토파	104명	야마자키파	25명
모리파	56명	가토파	15명
가메이파	53명	고모토파	13명
호리우치파	42명		

그러므로 고이즈미 총리가 국민지지를 배경으로 공기업의 민영화 등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정책결정과정에서 자민당의 간섭을 배제하려 하자,⁸ 하시모토파 등 비주류는 이에 반발하여

⁸- 2001년 11월 19일 고이즈미 총리는 내각이 마련한 법안을 자민당에서 사전심사를 하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조직적 연대를 강화하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표 II-3>에 나타난 바와 같은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과의 연대도 추구하였다.

즉, 비주류는 ‘반고이즈미’모임의 결성을 활발히 시도하였고, 아울러 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반론을 제기하였으며, ‘총리 주도의 정국’을 ‘자민당 주도의 정국’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내각 개편론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내각 개편을 개혁저항 세력과의 타협으로 인식하여 개각을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요컨대, 개혁을 둘러싸고 자민당내 주류·비주류간의 주도권 경쟁 및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표 II-3> 개혁대상(기득권 세력)과 자민당(2001년도)

개혁정책	개혁대상(기득권 세력)	개혁대상과 자민당과의 관계
공공사업예산 축소	대형 건설회사 및 공공사업 계획했던 지방자치단체	가메이 시즈카 전 정무 조사회장 중심의 중진 의원 지원
부실채권 정리	은행및 많은 건설·유통회사	주류파 중진급 의원들과의 지원 세력
우정사업 민영화	우정성 공무원 및 관련 단체 직원	전통적인 하시모토파 지지
공기업 통폐합	공기업 및 관련 단체 직원	여당 지지세력
국채발행 억제	지역구·지역단체에 예산 지원을 공약한 국회의원	주로 자민당 의원들이 예산 지원 공약을 많이 함

I
II
III
IV
V
VI

3. 2003년의 11·9 총선과 양대 정당 구도의 형성

일본의 야당인 민주당(원내 제2당)과 자유당(원내 제5당)은 고이즈미 연립정권의 출범이후 소극적인 대정부 비판 등으로 참의원 선거(01.7), 중·참의원(02.10) 등에서 저조한 실적을 거두면서 한계를 노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구(舊)사회당·신당사키가케 출신 의원, 자민당 이탈세력이 모인 구(舊)민주당, 자민당계의 민정당, 구(舊)민사당계인 신당친우(新黨親友), 노동조합 단체인 민주개혁연합 등으로 구성되어 중의원 115석 및 참의원 60석을 확보하고 있는 제1야당이지만, 국민지지율이 6~9%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진한 상태에 있었다. 오자와 이치로가 이끄는 자유당 역시 2000년 4월 연립정권 탈퇴 이후 군소정당으로 전락되는 등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따라서 간나오토 민주당 대표와 오자와 이치로 자유당 당수는 2003년 7월 23일 당수회담을 갖고, 자유당의 해체와 더불어 소속 의원들의 민주당에 합류하는 흡수합병 형식으로 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10월 5일 '신민주당(新民主黨) 합당대회'가 개최되고, 새로운 제1야당 신민주당이 발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 총선을 위한 2003년 10월 10일에 중의원이 해산되고, 11·9 중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신민주당은 발족 즉시 민주·자유 양당간 선거구 조정 등 합당 후속조치를 취하면서 2003년의 11·9 총선을 겨냥한 전령 준비를 추구하였고, 11·9 중의원 선거는 자민당과 민주당의 대결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전반적으로 자민당은 농촌지역과 70대 이상의 노

령층 및 여성 유권자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 민주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30~40대 및 남성 유권자층·무당파층 등에서 선전을 나타내었다.

11·9 총선거의 투표율은 과거 최저였던 96년의 59.7%에 이어 전후 두 번째 낮은 59.9%를 기록하였고, 선거결과는 자민당 부진, 민주당 약진, 사민당·공산당 등 진보정당의 퇴조였다.⁹

예컨대, 자민당은 총 237석을 차지함으로써 해산 전(247석) 보다 10석이 감소하여 단독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였고, 공명당은 해산 전(31석) 보다 3석 증가한 34석을 획득하였으며, 보수신당(保守新黨)은 해산 전(9석) 보다 5석 감소한 4석을 획득하였다. 연립정권 전체로서는 해산 전(287석)에 비해 다소 약화된 275석을 획득하였지만,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독점할 수 있는 절대안정 다수(269석) 의석을 확보하였다. 게다가, 11월 10일 오후 보수신당(保守新黨)이 해체와 더불어 자민당에 합류함으로써, 자민당은 단독 과반수(24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공산당(20석→9석), 사민당(18석→6석) 등 진보정당이 몰락하는 가운데 제1야당 민주당은 총 177석을 획득함으로써 해산 전(137석) 보다 40석이 증가한 선전을 함으로써 전후 최대의 야당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요컨대, 11·9 총선에서 자민당은 단독 과반수의 획득에 실패하였지만, 11·9 총선을 계기로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연립정부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자민 대 민주’의 양당대결 구도가 구축되었다. 아울러, 자민당 차원에서는 당내 최대 파벌인 하시모토파 등 비주류 세력은

9- 『朝日新聞』, 2003年 11月 10日.

I
II
III
IV
V
VI

의석수가 감소하는 퇴조세를 보였고, 주류파의 모리(杉)파가 세력을 신장하여 제2파별로 부상하였으며, 야마자키(山崎)파와 구(舊) 가토(加藤)파가 각각 의석을 확장하였다. 즉, 11·9 총선을 계기로 ‘자민당 대 민주당’의 양대정당의 대결구도아래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정국 주도력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¹⁰

4. 보수적 정치공간의 개혁화 지향과 고이즈미 총리의 개혁 정국 주도력 강화

2003년 9월 20일의 총재선거에서 3선에 성공¹¹한 고이즈미 총리는 ‘강한 일본’의 건설 및 세대교체를 지향하여 전후세대의 보수성향이 강한 신진·소장 정치인들을 당·정에 포진시켜 친정체제의 구축을 도모한 뒤, ‘자민 대 민주’의 대결 구도아래에서 개혁 정국 주도력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여야간의 정국 주도권 경쟁은 2004년의 7·11 참의원 총선을 의식하면서 ‘자민 대 민주’의 대결을 축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먼저, 고이즈미 정권의 집권 3주년¹²을 평가하는 2004년의 4·26 보궐선거에서 연립여당은 이라크내 일본인 인질사건의 발생(04.4.8)에

¹⁰- 11·9 총선직후 자민당에 합류한 구(舊)보수신당 소속 중·참의원 7명의 의원들은 자민당내 하나의 파벌인 ‘니카이 그룹’을 결성하고 활동을 개시하였다.

¹¹- 고이즈미 총리는 50%대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가메이 시즈카 전 정무조사회장, 후지이 다카오 운수대신, 고무라 마사히코 외무대신 등이 출마한 2003년 9·20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총 657표 중 399표(60%)를 획득하여 3선에 성공하였다. 즉, 2003년 9월 30일에 고이즈미 총재의 임기가 만료되므로, 동년 9월 20일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방당원 대표를 대상으로 총재선거가 실시되었는데, 고이즈미 총리는 50%대의 국민지지율을 바탕으로 하는 총선 경쟁력을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여 60%라는 다수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계속 총재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배정호, 『탈냉전시대 전환기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참조.

¹²- 2004년 4월 26일은 고이즈미 연립내각이 집권 3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다.

다른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문제, 연금개혁 등 각종 개혁정책을 선거 쟁점으로 삼아 민주당에 완승을 하였으나, 이어 자민당 지지율의 하락¹³과 더불어 무당파층이 증가하는 가운데 연금개혁 문제와 자위대의 이라크 다국적군의 참가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하면서 치러진 7·11 참의원 선거에서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2004년 7·11 참의원 선거의 결과는 자민당 지지층의 이탈로 인하여 자민당 부진, 민주당 약진, 공명당 현상유지, 공산당·사민당의 참패로 나타났다(<표 II-4>참조).

13. 아사히(朝日新聞)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5월 22일 제2차 평양 정상회담직후 54%였던 내각지지율이 6월 19~20일 조사에서는 이라크 다국적군 참가 결정에 대한 58%의 반대 표명과 더불어 40%로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아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불지지가 지지를 상회하는 상황이 2003년 3월의 이라크 개전 직후, 1년 3개월 만에 재차 나타난 것이다. 『朝日新聞』, 2004년 6월 22일.

<표 1-고이즈미 내각 지지율의 역전(2004. 6. 19~20 조사)>

支 持	40%
不支持	42%

<표 2-정당별 지지율(2004. 6. 19~20 조사)>

정 당	지지율(%)
자민당	30(37)
민주당	15(14)
공명당	4(2)
공산당	2(2)
사민당	1(1)
지지정당 없음	40(37)

* ()안의 수치는 5월 23일 조사 시의 지지율.

I
II
III
IV
V
VI

<표 II-4> 2004년 7·11 참의원 선거의 결과

정 당	획득 의석수
자민당	49(51)
민주당	50(38)
공명당	11(10)
공산당	4(15)
사민당	2(2)
무소속	5(9)

* ()안의 수치는 선거전의 의석수

민주당의 약진이 주목되는 부분인데, 오카다(岡田) 간사장을 신임 대표로 선출한 민주당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고이즈미 총리가 국민 연금을 일정기간 동안 미납한 문제, 내각의 실정 등을 부각시키면서 치열하게 선거전을 전개한 결과이다.

그러나 자민·공명당 연립정권 차원에서는 공명당의 1석 증가로 안정적인 다수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즉, 자민·공명당 연립정권은 7·11 참의원 선거에서 총 60석을 획득함으로써, 비개선 의석(79석)과 합쳐 139석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참의원 내 안정다수(129석)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7·11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부진한 결과, 고이즈미 총리에 대한 당내 비주류의 책임추궁의 공세와 더불어 야당의 내각 실정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었으며, 내각 지지율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이즈미 총리의 개혁정책 추진 및 당·정 개편에서의 정국 주도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국정 장악력의 약화를 막기 위해 대외관계를 위

한 수뇌외교에 노력을 기울이며, 2004년 9월 27일 제2차 고이즈미 연립내각의 개조 및 당 3억 인사를 독자적으로 단행하였다.¹⁴

이처럼, 전열을 재정비한 고이즈미 총리는 야당의 공세에 맞서 개혁 추진력 및 정국 주도력의 강화를 추구하면서, 최대현안인 우정 민영화, 중앙과 지방의 조세재정에 관한 삼위일체 개혁 등 구조개혁 노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고이즈미 총리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의한 정국운영은 ‘강한 일본의 건설’을 위해 ‘작은 정부’·‘민간주도 지향’ 등의 개혁을 지향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정국 주도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하였고, 보수성향의 정치공간이 개혁화를 지향토록 하였다.

따라서 경제개혁차원의 구조개혁, 안보개혁차원의 법·제도적 정비, 정치개혁차원의 파벌정치 타파 및 족의원 중심의 이익정치 쇠퇴 등이 추진되었으며, 헌법개정 논의도 정치권뿐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므로 고이즈미 총리는 최대 현안인 우정민영화 법안이 중의원에서 5표 차로 통과한 뒤, 2005년 8월 8일 참의원에서 17표 차로 부결

¹⁴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연립내각의 개조 및 당 3억 인사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당내 파벌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선거혁명’을 통해 등장한 고이즈미 총리는 제1차 내각의 구성에서 ‘파벌 파괴’의 인사를 단행하였고, 이후의 내각 구성에서도 가능한 파벌의 영향을 배제하였는데, 고이즈미 총리는 이번 2차 내각의 개조에도 파벌의 추천을 받지 않고 아울러 파벌 실력자들을 배제하면서 소위 ‘고이즈미류’의 독자적인 인사를 추구하였다. 둘째, 고이즈미 총리가 내각의 명단 발표 직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우정 민영화 실현 내각’이라고 특징지었듯이, 최대 현안인 우정민영화, 중앙과 지방의 조세재정에 관한 삼위일체 개혁 등 구조개혁 노선을 추구하기 위해 정책 실무형의 인사들을 기용한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고이즈미 총리가 내각 구성에 파벌 추천을 배제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고이즈미 총리의 전 파벌인 ‘모리파 편중’으로 나타났다. 즉, 17명의 각료 가운데 외무장관을 비롯한 5명의 각료가 모리파에서 기용되었다. 이는 당내 최대 파벌인 하시모토(橋本) 파벌(派閥)을 비롯한 비주류 파벌의 반발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되자, 즉시 정치생명을 걸고 중의원을 해산하였다. 즉, 우정민영화 개혁 반대파 일부 의원들이 자민당 공천의 배제에 따른 반발로 ‘국민신당(國民新黨)’을 창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위해 탈당을 감행하는 등 정국이 혼란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고이즈미 총리는 자신의 정치생명을 담보로 배수진을 치며 9월 11일 중의원 총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9·11 중의원 총선은 ‘개혁 대 반개혁’의 대결구도아래 고이즈미 연립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평가의 성향을 지니면서 치러졌다.¹⁵ 따라서 고이즈미 총리는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퇴진’이라는 배수진을 치면서 ‘소신 정치’로서의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킴과 더불어 ‘사즉생(死即生)’으로 선거에 임하였다. 그리고 우정민영화법안 반대파 의원들이 탈당하여 국민신당 소속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소위 30여개의 ‘반란군’ 지역구에는 ‘고이즈미의 칠드런(children)’이라고 불리는 신인들을 ‘자객’으로 출마시켰다.

9·11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을 비롯한 언론들의 여론조사에서는 자민당의 단독 과반수가 예측될 정도로 자민당의 확실한 우위가 나타났고,¹⁶ 이와 같은 여론조사의 결과는 9·11 중의원 총선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났다.

<표 II-5>의 결과처럼, 자민당은 과반수인 240석을 훨씬 상회하는 전후 제2위인 296석¹⁷을 획득하였고, 민주당은 기존의석보다 64석

15. 고이즈미 총리의 8·8 중의원 해산에 대해 ‘자폭 테러해산’, ‘자멸’ 등으로 표현하며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보수성향의 정치공간의 개혁화 지향 속에서 일본의 최대 경제단체인 경단련(經團聯)은 9·11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8월 29일 자민당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경단련(經團聯)의 중의원 총선에서의 자민당지지 표명은 1993년 이래 12년만의 지지 선언인데, 이는 고이즈미 총리의 구조개혁작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16. 『朝日新聞』, 2005年 9月 4日.



이나 적은 113석을 획득함으로써 대참패하였다. 게다가, 자민·공명의 연립여당은 전체의석(480석)의 2/3인 320석을 상회하는 327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자민·공명의 연립여당이 중의원이 가결시킨 법안을 참의원이 부결시켜도 중의원이 다시 가결시킬 수 있는 의석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의석수이다.

<표 II-5> 2005년 9·11 중의원 총선의 결과

구분	자민	공명	민주	공산	사민	국민 신당	신당 일본	기타
9·11 선거 결과	296 (+84)	31 (-3)	113 (-64)	9 (0)	7 (+2)	4 (0)	1 (-2)	19 (-14)
선거전 의석수	212	34	177	9	5	4	3	33

출처: 『朝日新聞』, 2005년 9월 13일.

그러므로 9·11 중의원 총선의 결과, 현실적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견제하던 소위 ‘3각 장치’ 즉 강한 야당, 이익집단로서의 ‘족(族)’의원 그룹, 당내 파벌 등이 무력화되었고, 따라서 고이즈미 총리는 국정운영을 위한 권력기반 및 정치적 입지의 강화를 바탕으로 보수성향의 정치공간속에서 개혁 정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되었다.¹⁷

고이즈미 총리는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06년 9월까지 구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2005년 10월 31일에 아베 신조, 아소 다로 등 차기

17. 9·11 총선에서 얻은 자민당의 의석 비율은 산술적으로 전후 2위이며, 전체의석(480석)에서 차지하는 자민당 의석(296석)의 점유율은 61.7%이다. 1960년 총선에서 이케다 내각이 기록한 점유율 63.4%가 전후 1위이다.

18. 배정호, 『탈냉전시대 전환기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총리 후보들이 포함된 ‘개혁 속행 내각’을 발족시켰다. 즉, 고이즈미 총리는 파벌과 관계없이 개혁 성향이 강한 인물들 내각을 구성하면서, 총리 후보자로 하여금 구조개혁추진을 경쟁시키는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이후, 일본 정국은 고이즈미 총리의 주도아래 전개되었다. 특히, 제 1당 민주당이 가짜 ‘송금메일’ 사건으로 대국민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면서, 고이즈미 총리의 정국 주도력은 한층 강화되었고, 보수적 정치공간의 개혁성향 속에서 포스트 고이즈미를 둘러싼 총재·총리 경쟁이 전개되게 되었다.

다만, 2006년 4월 마에하라 세지(前原誠司) 민주당 대표의 사임과 더불어 거물 보수정치인 오자와 이치로가 새로운 당 대표로 등장하게 되면서 일본 정국은 재차 여야의 대결 국면이 조성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가 고이즈미 총리에 대한 강한 비판의 정치를 전개하면서, 침체된 야당이 다소 활기를 띠는 모습을 나타내었고, 일본 정계는 ‘고이즈미 대 오자와’의 대결구도가 조성되는 듯한 양상을 보였다.

요컨대,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의 등장과 더불어 일본 정계가 무기력증으로부터 재차 활기를 찾는 가운데, 포스트 고이즈미를 둘러싼 총재·총리 경쟁이 동아시아 외교 및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격차사회의 해소, 구조개혁노선의 계승 등을 쟁점으로 하면서 전개되었다.

5. 고이즈미 총리의 리더십과 개혁정치에 대한 평가

고이즈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그에 따른 한·중과의 마찰

등 외교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였고, 국내적으로도 격차사회의 도래에 따른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고이즈미 총리의 리더십과 개혁정치에 관한 국민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즉, 고이즈미 총리의 신자유주의 노선에 따른 구조개혁의 이면에 '1억 중산층'의 붕괴에 따른 격차사회가 초래되었고, 대미 편중외교의 이면에 동아시아 외교의 부재가 나타나 심각한 한·일 갈등, 중·일 갈등이 초래되었지만, 고이즈미 총리의 리더십과 개혁정치에 관한 국민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고이즈미 총리의 리더십과 개혁정치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고이즈미 총리는 자민당의 정치개혁 차원에서 '파벌파괴'를 내세우며 당·정 인사에서 '탈파벌의 인사'를 추구하였고, 자민당 이익 정치의 핵심인 족(族)의원의 그룹의 무력화를 시도하였다. 즉, 고이즈미 총리는 국내정치 분야에서 자민당 이익정치의 핵심인 파벌과 족(族)의원 그룹을 무력화하면서 정치개혁의 이미지를 높였다.

둘째, 고이즈미 총리는 안보분야에서는 '정상국가'를 향해 일본유사를 대비한 법제 정비를 단행하였고, 미국의 대테러 지원 활동의 강화를 위해 테러대책특별법을 제정하였다. 나아가, 21세기 미·일동맹의 강화·확대를 지향하여 세계 속의 미·일동맹을 지향한 공통의 전략 목표를 설정하였고, 주일미군 재편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 등을 이루었다. 이는 고이즈미 총리의 안보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셋째, 고이즈미 총리는 침체된 일본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신자유주의 경제노선에 따라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구조개혁을 추구하였다. 즉, 경제분야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민간경제의 활력을 통해

I
II
III
IV
V
VI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로공단 민영화, 우정공사 민영화 등 구조 개혁 노선을 단행하여 경기회복, 경제재건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고이즈미 정권 내에서 장기 불황의 늪으로부터 벗어나 ‘잃어버린 10년’이 아닌 ‘21세기를 준비하는 구조조정의 10년’을 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5년간 집권한 고이즈미 정권의 핵심적인 업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고이즈미 총리의 개혁정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동아시아외교의 갈등, 격차사회의 도래에 따른 사회경제적 갈등 등에 따른 비판 속에서도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지지와 비판’이 혼재하는 국내외적 상황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대국민 지지는 그다지 큰 변동을 나타내지 않았고, 따라서 고이즈미 총리는 정국주도력을 장악하고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2005년 9·11 중의원 총선에서 자민당의 압승 이후, 제1 야당 민주당이 가짜 ‘송금메일’ 사건으로 대국민 신뢰성을 상실하여 대여 투쟁력이 극히 취약하게 되면서, 고이즈미 총리의 정국 주도력은 한층 강화되었다.

요컨대, 고이즈미 총리의 개혁정치의 추진과 더불어 일본의 정치공간은 보수적 정치공간의 개혁성향을 나타내었고, 그와 같은 정치공간 속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강한 리더십으로 정국을 운용하였으며, 그 결과 일본은 국제무대에 재차 경제 강국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업적을 바탕으로 고이즈미 총리는 자신의 개혁정책노선이 차기 정권에서도 계승되도록 하기 위해 후계자 경쟁에서 ‘킹 메이커’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III

2006년 9·20 자민당 총재선거의 주요 정책쟁점과 전개과정



1. 자민당 총재선거의 주요 정책쟁점

가. 동아시아 외교문제

고이즈미 정권은 미·일동맹의 강화와 이를 위한 대미 편중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한 반면, 한국, 중국 등과는 심각한 갈등을 빚으며 후유증을 초래하였다.

예컨대, 고이즈미 정권은 2001년 캠프데이비드 미·일 정상회담 및 2002년 2월의 부시-고이즈미 도쿄(東京)정상회담, 2003년 5월의 크로포드 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21세기의 지도력 분담(Power-sharing)’을 지향한 미·일 동맹의 강화, 전략적 중요성 등을 재확인·강조하였고, 테러대책특별법의 제정 및 대미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대미 편중정책의 전개와 더불어 미·일동맹의 세계화를 지향한 ‘공통의 전략목표’ 설정과 더불어 미·일 연합군 유사체제를 지향한 주일 미군의 재편 작업 등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 외교에서는 이와 같은 대미 편중 협력정책의 적극적 전개와는 달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영유권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한국, 중국과는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중·일관계는 중국내 반일감정의 심화¹⁹와 더불어 양국의 개선 노력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일본정부의 왜곡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추구·동지나해 무인도서의 영유권 주장 등에 격분한 중국인들이 1919년 5·4운동 이래 최대

¹⁹- 2003년 8월 4일에 일어난 일본 제국주의의 유기(遺棄)화학무기 폭발사건의 처리 문제, 9월 18일 중국 언론에 의해 폭로된 일본인 집단 매춘관광, 10월 29일 시안(西安) 서북대학(西北大學) 교내 파티시 일본 유학생의 음란공연에 대한 중국 교수 및 학생들의 시위사건 등으로 인하여 중국내 반일감정이 재차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규모의 격렬한 반일 시위를 전개하게 되면서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악화되었고,²⁰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갈등이 지속되었다.

한·일관계 역시 2005년에 접어들어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 및 독도영유권 문제, 일본 정부의 왜곡 역사 교과서 검정 통과 등으로 급속히 냉각되면서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²¹ 2005년 6·20 서울 한·일정상회담은 양국이 국교 정상화를 한지 40주년이 된 해에 개최되었지만, 독도영유권 문제, 일본 정부의 왜곡 역사 교과서 검정 통과 등으로 한·일관계가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²² 즉, ‘역사 인식차

20- 중국의 격렬한 반일 시위는 일본내 우익보수세력의 반중 감정을 자극하였고, 아울러 중·일간의 ‘기 싸움’ 양상과 함께 일본정부의 단호한 대중국 비판이 야기 되도록 하였다. 2005년 4월 17일 베이징 중·일 외교장관 회담직후 마치무라 노부다가 외무장관의 대중국 비판 발언과 더불어 일본 정치권에서는 대중국 비판의 강경발언이 잇따라 터져 나왔고, 4월 23일에 일본의 우익단체와 일반시민 2,000여명은 ‘중국타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거부’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흔들며 중국의 ‘반일 시위’에 항의하는 ‘반중 집회’를 전개하였다. 즉, 중국의 격렬한 반일시위 및 일본의 단호한 대중 강경 대응으로 인하여, 중·일관계의 갈등은 정면충돌로 치닫으며 증폭되었다. 이처럼 긴장고조의 중·일관계는 중국정부가 반일 시위가 자칫 반정부 소요사태로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엄중 경고를 내리고, 나아가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제1회 아시아·아프리카회의에서 과거 일제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표명함 더불어 중·일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다소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배정호,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5).

21- 일본의 시마네현의 의회가 2005년 3월 16일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을 제정하자, 한국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일본의 과거 침탈을 정당화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독도 문제 및 역사 왜곡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대일 외교 4대 기조와 5대 방향을 담은 신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이어 3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은 초강경 어조의 대일 비판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하여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 역사 교과서 왜곡 등을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22- 최대 현안이었던 독도 문제는 ‘우리영토를 불필요한 논란거리로 만들지 않겠다’는 한국측 의도에 따라 의제에서 빠졌고, 따라서 양국 정상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역사 인식 및 역사교과서 문제 등에 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였으

만 확인'(『중앙일보』, 6.21), ‘풀지 못한 넥타이처럼 풀지 못한 한·일 인식차’(『동아일보』, 6.21), ‘젓가락 들기도 무거웠던 만찬’(『조선일보』, 6.21), ‘한·일 입장차만 확인’(『한겨레』, 6.21), ‘과거사 이견 못 좁혀’(『세계일보』, 6.21) 등으로 평가하였고, 일본 언론들은 ‘역사인식의 간극 메우지 못함’(『朝日新聞』, 6.21), ‘양측 주장의 평행선’(『毎日新聞』, 6.21), ‘역사에 관한 간극 해소 실패’(『讀賣新聞』, 6.21) 등의 평가처럼, 한·일 양국의 주요 3대 현안인 독도영유권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문제 등을 그대로 남긴 채, 끝났다. 이후의 한·일관계는 냉각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이즈미 총리의 10월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 12월의 정상회담의 유산과 함께 한층 악화되었다. 특히, 2006년 4월 일본의 동해 탐사 문제로 야기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독도’ 문제는 영유권 이상의 문제로서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정서적 문제와 얽히면서 한·일관계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불씨이다.

일본은 동북아 지역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뿐 아니라, 닌카이타이(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어 왔고, 에토로후 등 북방 4개 도서의 영유권 문제로 러시아와 갈등을 빚어 왔다.

일본 국내에는 미국에 너무 편중된 고이즈미 외교를 비판하며 동

며, 나아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이를 위한 한·미·일 3국의 외교적 공조원칙의 재확인, 차기 정상회담의 연내 일본에서의 개최 합의 등은 이루어졌지만,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문제 등 주요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현격한 인식의 차이만 확인되었을 뿐 합의는 도출되어 나오지 못했다. 즉, 노무현 대통령은 ‘철저한 과거사 인식’을, 고이즈미 총리는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하는 데, 한·일 양국의 주요 3대 현안인 독도영유권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문제 등은 그대로 남게 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처럼, 제2기 역사공동위원회 발족 및 산하에 교과서연구위원회 신설 등 ‘낮은 수준의 합의’만이 이루어졌다.

아시아 외교를 중시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한국,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포스트 고이즈미 정권의 주요한 외교과제로 부각되었다.

일본의 정치권, 언론계, 재계 등은 동아시아 외교의 핵심 과제로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강조하였는데, 미·일동맹외교와 동아시아외교의 균형을 취하는 것은 포스트 고이즈미 정권의 주요 외교과제이다.

나. 야스쿠니 신사 문제

일본이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제국(諸國)과의 갈등을 초래한 결정적 계기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총리로 취임하기 전에는 한번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바 없지만, 총리 취임 후 한국, 중국 등의 강한 반발 및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였다.

야스쿠니 신사는 1869년 메이지 천황 시절 황군(皇軍)의 훈령을 위로하기 위해 국가신사로서 ‘쇼콘사(招魂寺)’라는 이름으로 건립되었는데, 1879년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로 개칭되었다.

도쿄(東京)중심가의 황궁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는 1868년 도쿠가와 막부를 타도한 내전인 보신(戊辰)전쟁 이후 태평양 전쟁에 이르기까지 11개 전쟁의 전몰자 총 246만여명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고, 이 가운데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기 때 강제로 전쟁에서 희생된 한국인 21,000명의 위패도 포함되어 있으며,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 14명의 위패도 봉안되어 있다.

따라서 1978년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의 위패 봉안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전쟁 정

당화 행위로 간주하면서, 우려와 비판을 표명하게 되었다.

일본 천황이나 총리는 주변국의 비판을 의식하여 대체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신중을 기해왔는데, 고이즈미 총리는 전혀 이를 의식하지 않고 2001년 4월 취임 이래 2006년 5월까지 5번의 참배를 감행하였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인하여 한국, 중국 등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면서, 일본 국내에서도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 비판이 비등해졌고, 미국 정계에 까지도 문제시되었다.

오사카(大阪) 고등법원은 2005년 9월말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위헌(違憲)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일본 보수·우익계의 거물 와타나베 츠넌오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주필은 『論座』(2006년 2월호)에서 와카미야 요시후미 논설주간과의 대담을 통하여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A급 전범뿐 아니라 전쟁 관계자들의 책임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²³

또, 제1야당 오자와 이치로 대표는 대중관계 개선을 지향한 동아시아 외교를 중시하고 고이즈미 총리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2006년 4월 10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A급 전범은 처음부터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A급 전범 합사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전몰 영령부에서 A급 전범의 명단 삭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정치인으로서의 A급 전범 합사문제의 해결에 관한 최초의 공개적 의견 표명이기도하다.

아울러, 2006년 7월 20일에는 고(故)히로히토 천황(1901~1989)이

²³ 『論座』, 2006年 2月號.

I
II
III
IV
V
VI

A급 전범 합사를 못마땅히 여겨 참배를 거부한 사실이 니혼게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을 통하여 보도되기도 하였다.²⁴

그리고 헨리 하이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2006년 4월말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하여 동년 6월말 방미하는 고이즈미 총리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려면 “앞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앞졌다는 약속을 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만약 고이즈미 총리가 미국 의회 연설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면 “진주만의 아픔을 기억하는 미국 인들은 모욕당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헨리 하이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문제로 삼으면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는 국제화되었는데, 차기 총리 경선에서 여야간은 물론 자민당 내에서도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다.

후쿠다 야스오를 차기 총리로 내심 지원하고 있는 모리 요시로 전 총리는 2006년 5월 28일 ‘차기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아울러 ‘A급 전범 분사론’을 강하게 주창하였다.²⁵

요컨대,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는 한국, 중국 등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동아시아외교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써, 차기 자민당 총재 경선의 쟁점 사항뿐 아니라, 차기 총리 경선시 여야간의

24. 『日本經濟新聞』, 2007年 7月 20日.

25. 제2차대전 직후, 도쿄재판의 판결에 따라 처형되거나 투옥 중 A급 전범들은 14명이다. 제2차대전 전몰자 가족들의 유족회도 이들 A급 전범들의 위패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분사 방안을 공식제기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야스쿠니 신사측은 “신도 교리상 한번 모셔진 영령은 분리가 불가능하다”며 분사에 반대하고 있다. 『중앙일보』, 2006년 5월 29일 및 2006년 5월 30일.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요 사항이다.

다. 주일미군의 재편과 기지·비용문제

2006년 5월 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SCC, 2+2)에서는 3년 반에 걸친 주일미군의 재배치·재편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력을 위한 실행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표 III-1> 주일미군 재배치·재편의 주요 로드맵

2007년 3월까지	토지반환의 계획 작성(오키나와현내 6개 시설)
2008년도	요코다(横田) 공역(空域)의 관제 업무의 일부 반환(요코다 기지)
2008년도 미국 회계연도(2008년 9월말까지)	미국 육군 제1군단 사령부 재편(자마 기지)
2010년도	항공자위대 사령부 등의 이전(요코다 기지)
2012년도까지	육군 중앙 기동집단사령부의 신설·배치(자마 기지)
2014년도까지	후텐마 비행장의 대체시설 완성, 후텐마 비행장의 전면 반환, 오키나와 해병대의 캠프 이전 완료, 아츠키(厚木) 기지의 미 해군의 항모함재기 부대의 이와구니(岩國) 기지로의 이전

<표 III-1>의 로드맵처럼, 주일미군의 재배치·재편이 전개될 경우, 총비용은 3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이 가운데 일본이 260억 달러(약 3조 엔)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60억 9,000만 달러는 오키나와 해병 병력의 이전비용이다. 즉, 오키나와의 코트니 캠프에 있던 제3 해병 원정군 사령부의 병력 15,000명 가운데 8,000명

I
II
III
IV
V
VI

정도를 삭감하고, 이들 대부분을 꺾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102억 달러 가운데 59%인 60억 9,000만 달러를 일본이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표 III-1>과 같은 로드맵에 따라 주일미군의 재편이 완료 될 시쯤, 자위대와 주일미군은 상호운용 및 통합운용의 기능 강화, 방공(防空) 및 미사일방위(MD) 공동능력의 강화, 기지이전과 부단 경감 등을 통하여 군사적 연대의 강화를 추구하며 ‘동아시아 미·일 공동사령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지만, 이를 위한 로드맵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일본정부는 기지이전 및 비용 부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²⁶

예컨대, 후텐마 기지의 슈와브 해안지역으로의 이전 등 지방자치체가 기지이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할 경우, 중앙정부의 권한에 의해 이를 집행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을 마련해야 하고, 아울러 오키나와 해병 병력의 꺾으로의 이전비용은 미·일 안보조약의 법적 근거를 넘어서는 비용이므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요구해야 한다.

2006년 5월 1일 주일미군재편에 관한 로드맵의 발표 이후, 고이즈미 정부는 기지이전·비용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주일미군기지 이전 등의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교부금 등 대대적 지원을 제공하는 10년 한시 특별조치법²⁷을 추진하였다. 2007년에 제정될 전망의 특별조치법은 포스트 고이즈미 정권의 몫이며 정책 과제이다.

²⁶ 배정호, “강화되는 미·일동맹과 한국의 전략대안,” 『국제문제』, 8월호 (2006); 배정호, “21세기 미일동맹의 강화와 한반도,” 『국제문제연구』, 제6권 3호 (2006).

²⁷ 특별조치법에는 후텐마의 대체기지 후보지로 결정된 오키나와현 나고(名護)시 등 부담을 안게 된 지방자치체를 ‘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미군 재편 대책 교부금’을 제공하고, 대규모 공공사업시 국가보조금을 대폭 증액하여 지원하는 구상이 포함되어 있다.

라. 격차사회 문제

고이즈미 정권은 경제재건, 경기회복 등을 위하여 민간경제의 활력과 개방을 통해 경제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신자유주의 노선에 따라 우정공사 민영화, 도로공단 민영화 등의 구조개혁을 추구하였다.

이와 같은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에 따라 10년 경제불황의 늪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일본사회에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초래되었다. 즉, 일본사회는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의 조짐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1억 중산층’을 의미하는 신중간대중사회의 붕괴가 초래되면서 ‘승자’와 ‘패자’의 양극화 사회로 변모하게 되었다. 특히, 20·30대의 젊은 층에서 일본 사회의 격차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본사회의 격차화(格差化)에 대해 야당과 언론은 ‘격차사회는 고이즈미 개혁의 그림자’라고 비판을 가하였고, 이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자유경쟁의 결과라면 격차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모두가 경제성장속에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일본정부는 2006년 3월 말에 아베 신조 관방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도전 추진회의’를 발족시켰다. 즉, 일본정부는 글로벌 경쟁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격차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중산층 붕괴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요컨대, 고령화, 청년실업, 저임금·비정규직 등으로 인한 하류사회화·격차사회화 등의 문제는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에 대한 비판의 상징이므로, 격차사회와 중산층 육성 방안은 차기 총재·총리 경선의 뜨거운 쟁점인 동시에 차기 정권의 핵심 정책과제이다.

I
II
III
IV
V
VI

마. 재정재건 문제와 소비세 인상

일본의 재정은 거품경제의 붕괴로 인해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악화하기 시작했다. 즉, 본 정부가 1991년 8월부터 거품경제의 붕괴에 따른 경기 침체의 회복을 위하여 공공투자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종합경제대책을 시행하게 되고, 이를 위한 재원확보의 국채 발행을 증가하게 되면서, 일본의 재정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06년 5월 즈음, 국채 발행의 잔고가 지방채를 포함하여 약 770조 엔에 이르렀다. 소자고령화(少子高齢化)의 대응을 위한 재정확보 등 재정재건 문제는 포스트 고이즈미 정권의 중요한 과제이다.

재정재건을 위해서는 ‘세출의 억제와 세수(稅收)의 증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데, 이는 정권적 차원에서는 매우 부담이 되는 조치이다.

특히, 세수 증대를 위한 간접세인 소비세의 인상은 샐러리맨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는 포스트 고이즈미 정권에 지지율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부담스러운 조치이다. 현행 소비세율은 5%인데, 재정재건을 지향한 소비세율은 10~15%로 추정되었다.

요컨대, 재정재건을 위한 소비세율 인상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면서, 차기 정권에 정치적 부담이 되는 문제이다.

2. 9·20 자민당 총재 선거의 정치적 변수와 전개과정

가. 자민당 총재 선거의 정치적 변수

자민당 총재 선거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관방장관이 우위를 점하는 상태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관방장관 아소 다로(麻生太郎) 외무장관, 타나카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재무장관 등이 추격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는데, 권력게임의 주요 정치적 변수로는 오자와 이치로의 부상과 정국의 질적 변화, 자민당 내의 이해관계와 모리 파벌의 영향력, 고이즈미 칠드런(children)과 고이즈미 총리의 영향력, 총재선출방식, 동아시아 외교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의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1) 오자와 이치로의 부상과 정국 영향

27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는 다나카·다케시다 파벌의 황태자로서 1989년부터 3차례나 간사장직을 맡으며 향후 유력한 총재·총리감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93년 6월 17일 미야자와 내각에 대한 야당의 불신임안의 가결로 인한 자민당 탈당사태가 초래되면서,²⁸ 오자와는 자민당과 결

²⁸ 가이후 내각을 계승하여 등장한 미야자와 내각에서는 1993년 4월 自民黨 정치개혁본부가 마련한 ‘단순 소선거구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치자금 규정법 개정안,’ ‘정당보조법안,’ ‘衆議院 의원 선거구 확정 위원회 설치 법안’ 등 ‘정치개혁 관련 4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맞서 社會黨과 公明黨은 국회에 ‘소선거구 병용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사항으로 하는 ‘정치개혁 관련 6법안’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衆議院에서는 과 社會黨 및 公明黨이 제출한 ‘정치개혁 관련 6법안’이 심의되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自民黨의 ‘단순 소선거구제’와 社會-公明黨의 ‘소선거구 병용형 비례대표제’의 대립이었다. 衆議院 選舉制度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속에서 自民黨은 야당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표결로 대응하려는 방침을 세우게 되며, 自民黨의 표결방침에 반발한 社會黨·公明黨

별하고 새로운 연립정권의 하나인 新生黨 대표간사로서 정치활동을 전개하며, 저서 『日本改造計劃』(1993)을 통하여 ‘보통국가’론을 주창하며 국제국가 일본의 국제공헌을 생존전략으로 주장하였고, 아울러 ‘UN 중시의 평화전략’과 ‘미·일을 기축으로 하는 평화유지전략’을 제시하였다.²⁹ 즉,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정치인으로서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후 오자와는 야당인 신진당 대표→자유당 대표→민주당 부대표의 정치과정을 거쳐 2006년 4월 7일에 119 : 72표로 간 나오토(菅直人) 전(前)대표를 누르고 민주당 대표로 ‘와신상담’ 끝에 등장하였다. 즉, 1996년 10·20 총선에서 자민당 정권이 부활하게 되면서, 야당 지도자로서 세대교체의 분위기의 영향속에 다소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오자와 이치로가 제1당 민주당 대표로서 포스트 고이즈미 시대로의 전환기에 재차 적극적인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고이즈미 이치로 총리 보다 훨씬 정계 거물이었던 오자와 이치로는 민주당 대표 취임 즉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民社黨은 1993년 6월 17일 국회에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야당의 내각 불신임안은 自民黨 하타派 의원들의 동조에 힘입어 가결되었다. 미야자와 내각의 불신임안이 가결된 직후인 6월 18일 밤에 衆議院은 해산되고, 自民黨에서는 탈당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다케무라 마사요시(武村正義)를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은 탈당하여 ‘新黨 사키가케’를 결성하였고, 이어 하타派 소속 의원들이 탈당하여 ‘新生黨’을 결성하였다. 즉 일본정치는 정치개혁과 권력게임 속에서 중요하기 시작한 것이다. 배정호, 『탈냉전기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과 대외정책』(서울: 통일연구원, 1999), pp. 5~6.

²⁹ 오자와 이치로는 신국제질서의 구축에 적극적으로 參劃하는데 있어서 자위대가 핵심적인 수단이라는 인식아래에서 수동적인 전수방위전략에서 능동적인 평화창출전략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자위대를 재편성해야 하고 UN대기군을 창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오자와의 주장은 1995년 12월 新進黨 당수 출마 때에도 나타났다. 즉, 新進黨 당수에 출마한 오자와는 미·일안정보장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미·일동맹관계를 강화할 것을 역설하였고 아울러 UN경찰부대를 창설하여 UN평화유지활동에 종사토록 하자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小澤一郎, 『日本改造計劃』(東京: 講談社, 1993).



동아시아 경시 외교에 대한 비판 등을 통하여 ‘오자와 대 고이즈미’의 대결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정국 주도권의 회복·강화를 위한 정치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오자와 이치로 당 대표의 등장과 더불어 일본 정계는 ‘자민당 대 민주당의 대결구도’ 아래 다소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는 오자와 이치로 당 대표의 등장이 포스트 고이즈미를 둘러싼 권력게임, 포스트 고이즈미 시대의 보수세력의 정계개편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일본 보수 정치인의 대명사였던 오자와 이치로의 중량이 보수편향의 아베 신조의 정치적 중량과 비교되면서 아베 신조를 왜소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오자와 이치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정국의 중심에서 고이즈미 총리에게 적극적인 정치적 공세를 펼치며, 강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포스트 고이즈미 시대의 정국 운용, 정계 재편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즉, 오자와 이치로의 변수는 기본적으로 오자와 이치로의 리더십과 정치력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2) 모리(森)파벌의 영향력

고이즈미 총리는 ‘강한 일본의 건설’을 위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의한 정국운영을 추구하면서 보수성향의 정치공간이 개혁화를 지향토록 하였다. 그리고 고이즈미 총리는 그와 같은 정치공간의 성향을 활용하여 정치개혁차원의 파벌정치 타파 및 족의원 중심의 이익 정치 쇠퇴 등을 추진하였으며, 내각구성 등 인사에 있어서 파벌의 영향력을 배제하였다.

그러므로 자민당의 파벌의 정치적 영향력은 내각 및 당 인사에서

I
II
III
IV
V
VI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2005년 9·11 중의원 총선을 계기로 가속화되었다.

고이즈미 개혁의 반대세력의 일부가 참의원에서의 우정민영화 법안 부결 파문을 계기로 탈당을 결행하는 등 정치적 내홍을 겪으면서 치른 9·11 중의원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³⁰하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견제하던 소위 ‘3각 장치’ 즉, 강한 야당, 이익집단로서의 ‘족(族)’의원 그룹, 당내 파벌 등이 무력화되었다.

특히, 일본 정치의 주요 특성인 50년의 자민당 파벌정치는 사실상 와해 상태에 이르렀다. 최대 파벌이던 구(舊) 하시모토(橋本파)는 16명이 우정민영화 반란군에 가담함에 따라 제2위 파벌로 전락했고, 고이즈미 출신 파벌인 모리(森)파가 제1위 파벌로 등장하게 되었다. 제3위 파벌인 호리우치(堀内)파는 파벌회장인 호리우치 미쓰오(堀内光雄)의 탈당에 따른 내분으로 지리멸렬이고, 제4위 파벌인 가메이(龜井)파는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파벌회장의 탈당으로 인해 공중분해상태에 놓였다. 즉, 과거처럼 자민당 파벌의 역학 및 이해관계에서 총재가 선출되고, 주요 인사(人事)가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당내 최대 파벌인 모리(森)파벌 존재는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파벌의 침몰속에 모리(森)파벌의 고이즈미 총리에 대한 영향력은 격감되었지만, 차기 총재의 유력한 후보인 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가 모리(森)파벌 소속이고, 고이즈미 총리 역시 모리(森)파벌 출신이기 때문이다. 즉, 모리(森)파벌이 세대교체 등 당내 이해관

³⁰- 9·11 총선에서 자민당은 과반수인 240석을 훨씬 상회하는 전후 제2위인 296석을 획득하였고, 민주당은 기준의석보다 64석이나 적은 113석을 획득함으로써 대참패하였다. 게다가, 자민·공명의 연립여당은 전체의석(480석)의 2/3인 320석을 상회하는 327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계와 얽히면서 차기 총재선거에서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파벌 영수인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를 비롯하여 모리(森)파벌은 파벌의 분열을 우려하여 자파 출신의 아베 신조와 후쿠다 야스오를 단일후보로 조정하려 하였고, 이에 고이즈미 총리는 후쿠다 야스오로 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난색을 표명하면서,³¹ 개혁노선의 계승자가 후계자로서 책임자임을 강조하였다. 즉, 고이즈미 총리는 우회적으로 아베 신조의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후쿠다 야스오는 7·20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건이후 ‘아베 대망론’이 확산되자, 9월 21일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모리(森)파벌은 차기 총재선거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고, 모리(森)파벌의 움직임은 당내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다른 정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목되는 변수이다.

(3) 고이즈미 칠드런(children)과 고이즈미 총리의 영향력

고이즈미 총리는 최대 현안인 우정민영화 법안이 중의원에서 5표 차로 통과한 뒤, 2005년 8월 8일 참의원에서 17표 차로 부결되자, 즉시 정치생명을 걸고 중의원을 해산하였다. 즉, 고이즈미 총리는 중의원 해산에 대해 ‘자폭 테러해산,’ ‘자멸’ 등으로 표현하며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자신의 정치생명을 담보로 배수진을 치며 ‘8·8 중의원 해산→9·11 중의원 총선거 실시’를 결단하였다.

이와 같은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적 결단에 대해 우정민영화 개혁 반대파 의원들은 크게 반발하였고, 자민당 공천이 배제된 일부 의

31. 『朝日新聞』, 2006年 5月 4日.

I
II
III
IV
V
VI

원들은 탈당하여 ‘국민신당(國民新黨)’을 창당하여 출마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고이즈미 총리는 우정민영화법안 반대파 탈당의원들의 소위 30여개의 ‘반란군’ 지역구에 ‘고이즈미의 칠드런(children)’이라고 불리는 신인들을 ‘자객’으로 출마시켰다.

그 결과, 2005년의 9·11 중의원 총선에서 자민당은 과반수인 240석을 훨씬 상회하는 전후 제2위인 296석³²을 획득하였고, 이 가운데 ‘고이즈미의 칠드런(children)’이라고 불리는 ‘자객’ 후보들이 83명 당선되었다.

2006년 6월 즈음, 이들 83명의 초선의원 그룹인 ‘83회’는 자민당의 최대 파벌인 모리(森) 파벌(약 86명)에 수적으로 필적하는 세력이었다.³³

‘83회’는 제1의 모리 파벌에 이어 제2의 파벌과 유사한 영향력을 지니며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활동을 전개하였다. 즉, ‘83회’는 고이즈미 총리의 당내 정치적 파워의 기반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내각·당 인사에서 파벌 배제에 의한 파벌의 정치적 영향력의 약화, 일부 파벌의 영수 탈당에 따른 구심력의 상실³⁴

32- 9·11 총선에서 얻은 자민당의 의석 비율은 산술적으로 전후 2위이며, 전체의석(480석)에서 차지하는 자민당 의석(296석)의 점유율은 61.7%이다. 1960년 총선에서 이케다 내각이 기록한 점유율 63.4%가 전후 1위이다.

33- 자민당 파벌 세력도(2006.6.30)

森派	津島派	丹羽·古賀派	山崎派	伊吹派	高村派	谷垣派	二階 그룹	河野 그룹
86명 (중60+ 참26)	75명 (중40+ 참35)	48명 (중33+ 15)	36명 (중31+ 참5)	32명 (중18+ 참14)	15명 (중중13+ 참2)	15명 (중11+ 참4)	14명 (중12+ 참2)	11명 (중10+ 참1)

* 중: 衆議院 의원, 참: 參議院 의원

34- 우정사업 민영화 법안 부결 파동의 후유증으로 파벌 영수인 호리우치 미쓰오(堀内光雄),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등이 탈당함에 따라 일부 파벌은 구심력의



등을 고려해 볼 때, 고이즈미 총리를 구심점으로 ‘고이즈미의 칠드런’ 그룹은 파벌 이상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가능케 할 수 있다.

요컨대, 고이즈미 총리와 ‘고이즈미의 칠드런’ 의원들과의 관계, ‘고이즈미의 칠드런’ 의원들의 응집력은 9·20 총재·총리 선거 및 포스트 고이즈미 시대의 정계개편에서 매우 주목되는 변수이다.

(4) 총재선출 방식

현행 자민당의 당칙(黨則)에 따르면, 총재선거는 당 소속의 중·참의원 국회위원들과 도도부현(都道府縣)의 대표들에 의해 치러진다.

총재의 임기(3년) 종료에 의해 정규 선거가 치러질 경우, 중·참의원 소속 국회의원 및 도도부현(都道府縣)의 대표들(47인) 뿐 아니라, 당원·당우들(1만당명 1표)도 투표에 참가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본선 이전에 지방표 결정을 위한 지방의 당원·당우들에 의한 예비선거가 행해졌다.

그리고 총재가 임기(3년) 만료전에 사퇴했을 경우에는 중·참 양원의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과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의 대표들에게 약식으로 총재선거가 치러졌다.

그러나 총재 선출 방식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당규의 기본 틀내에서 다소 융통성있게 운용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2001년 4월 24일의 총재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전의 선거였으므로, 선거인단이 국회의원과 도도부현(都道府縣) 지부의 대표들에 의해 구성되는 약식 선거였다. 그러나 자민당은 폭넓은 출마기회 부여 및 당원들의 의사 반영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① 총재 후보

상실로 인해 한층 약화되었다.

I
II
III
IV
V
VI

등록을 위한 추천 의원 수의 감축(30명→20명), ② 도도부현(都道府縣) 지부의 표 확대(1표→3표), ③ 지부의 밀실정치의 이미지를 타파하기 위해 예비선거 실시, ④ 예비선거에서 1위 득표를 한 후보에게 지부 할당표 3표 모두지지 등의 선거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4월 19~23일에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지부의 예비선거를 거친 뒤, 24일 자민당 본부에서 소속 국회의원(346명) 및 각 지부 대표(141명) 등 총 487명의 선거인단이 참석하는 선거를 통하여 총재가 선출되는 방식을 시행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자민당 총재 선출 방식은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신뢰·지지를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당규의 기본틀 내에서 탄력있는 운용이 가능하였다.

그러므로 2006년도 9월의 자민당 총재 선거와 관련, 당 일각에서는 ‘국민참여형’의 도입이 주장되었다. 고이즈미 총리 역시 대중적 인기가 높은 아베 신조의 총재 당선을 위해 ‘국민참여형’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국민참여형’은 예상하기 어려운 경합의 전개, 국민 참여를 통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도 제고 등을 꾀할 경우에 도입이 검토되는데, 당내 기반이 취약하더라도 대중적 인기가 높은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아베 대 후쿠다의 대결이 예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된다면, ‘국민참여형’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지만, 강력한 도전자였던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의 불출마 선언에 따른 도중 하차로 국민 경선행의 도입은 무산되었다.

나. 자민당 총재선거의 전개과정

5년여 만에 치러지는 후계자 경쟁이므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본의 격차사회로의 변화, 동아시아외교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의 쟁점사항을 축으로 전개되었으므로 주변국, 야당 및 언론들의 정책적 관심도 매우 높았다.

그러므로 포스트 고이즈미를 향한 권력게임은 ‘자민당 대 야당’을 큰 틀로 하면서 자민당내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전개되었다. 즉, 포스트 고이즈미를 향한 권력게임은 주요 변수인 오자와 이치로의 부상과 정국의 질적 변화,³⁵ 고이즈미 총리의 고이즈미 칠드런(children)에 대한 영향력, 자민당내의 이해관계와 모리 파벌의 영향력, 동아시아 외교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의 영향을 받으며 전개되었고, 연립내각의 파트너인 공명당, 민주당 등 야당, 언론 등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아베 신조의 대세론’ 속에 후쿠다 야스오가 아사히신문(朝日新聞) 등 일부 언론의 지원 아래 추격하면서, 자민당 총재 경선은 ‘아베 신조 대 후쿠다 야스오’의 경쟁을 축으로 전개되었다.

다시 말해, 현재 포스트 고이즈미 시대의 자민당 총재 및 총리를 지향하고 있는 유력정치인은 아베 신조 관방장관, 후쿠다 야스오 전(前)

35- 제1당 민주당은 가짜 ‘송금메일’ 사건으로 대국민 신뢰성을 상실하고 마에하라 세지(前原誠司) 대표의 사임, 나가다(永田壽康)의원의 의원직 사직 등과 더불어 침몰하게 되면서 제1야당으로서의 정계의 영향력을 거의 상실하게 되지만, 거물 보수정치인 오자와 이치로가 당 대표로 등장하게 되면서 대고이즈미 노선에 대한 강경 비판을 시작으로 새롭게 활력을 되찾았다. 즉, 오자와 이치로 당 대표의 등장과 더불어 일본 정계는 ‘자민당 대 민주당의 대결구도’ 아래 다소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는 오자와 이치로 당 대표의 등장이 포스트 고이즈미를 둘러싼 권력게임, 포스트 고이즈미 시대의 보수세력의 정계개편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관방장관, 아소 다로오 외무장관, 다니가키 사다카즈 재무장관 등인데, 동아시아외교의 부재를 우려하는 차원에서 일부 언론·전문가 그룹 등의 후쿠다 야스오 지원, 오자와 이치로의 등장과 고이즈미 비판 노선에 따른 정치권의 질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아베 신조 대 후쿠다 야스오’의 경쟁으로 압축되었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 니혼게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 등 언론기관의 여론 조사를 참고로 차기 총리 후보 지지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아베 신조와 후쿠다 야스오의 대결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2005년말까지 ‘아베 대망론’으로 40%대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였지만, 2006년에 접어들면서 30%대로 하락하였고, 7·5 북한 미사일 발사사건 이후 일본 국민들의 안보 불안 고조와 함께 재차 40%중반대로 급상승하였다.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은 이와 반대로 2005년 말까지만 해도 10%대를 밀돌았지만, 2006년에 접어들면서 20%대를 상회하면서 격차를 좁히기 시작하였으나, 7·5 북한 미사일 발사사건 이후에는 주춤하였다. 즉,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비등하고 국제문제로 비화되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의 지지율이 급부상하였으나, 7·5 북한 미사일 발사사건에 직면하면서 한계를 나타내었던 것이다.

‘아베 신조 대 후쿠다 야스오’ 경쟁·대결은 <표 III-2>과 같이 유·불리한 상황의 전개를 비교·전망할 수 있는데, 아베 신조 관방장관의 대망론이 7·5 북한 미사일 발사 사건이후 강하게 부각·확산되면서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의 역전 전망론은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은 7월 21일 9·20총재선거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따라서 ‘아베 대 후쿠다’의 대결구도 속에서 야스쿠니 참배 논쟁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은 매우 미약하게 되었고,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차기 총재·총리로서 등장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게 되었다.

즉, 아베 대세론의 확산 속에서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9·20 선거에서 주요 정책의 쟁점 사항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하며, 어느 정도의 지지율 및 득표력을 과시하면서 총리로서 등장할 것인가가 주목받게 되었다.

<표 III-2> 아베 신조와 후쿠다 야스오의 유·불리 예상 상황 전개 비교

	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
유리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이즈미 총재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고이즈미 칠드런 의원들의 지지가 집결될 경우. ○자민당 쇄신을 위한 개혁과 이를 위한 세대교체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될 경우. ○여론이 미·일동맹외교를 중시하여 주일미군 재편을 위한 기지·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로드맵 실행의 적임자로 부각할 경우. ○미·일동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특별조치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나아가 헌법의 집단자위권 확보 등이 필요하므로, 고이즈미 총리를 계승하여 법적·제도적 차원의 안보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우익세력의 영향력이 증대할 경우. ○납치문제 등과 관련 대북 강경 정책, 국제정치지도국을 지향한 ‘강한 일본(strong Japan)’의 건설 등을 위해 젊고 강력한 리더십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당과 언론의 고이즈미 정권의 동아시아 외교 실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총재 선거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경우. ○고이즈미 총재의 정치적 영향력이 저하되어 총재선거에서 고이즈미 칠드런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취약할 경우. - 고이즈미 칠드런 의원들의 다수가 총재선거에서 개별적 행동을 취할 경우. ○차기 총리의 정책조정능력·정치적 역량, 경륜 등이 중요시될 경우. ○제1야당 대표 오자와 이치로의 등장으로, 이에 상응할 수 있는 총재·총리가 요구될 경우. ○자민당내 증견 정치인들의 세대교체를 우려하는 의견이 강해지고, 최대파벌의 영수인 모리 요시로 전 총리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경우.

I
II
III
IV
V
VI

	<p>요구가 있을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동해안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국민들이 안보불안감을 느끼며 북한에 대해 단호하고도 명확한 입장을 가진 리더를 선호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사히 신문 등 주요언론이 국익을 위한 차기정권의 주요 국정국제로 동아시아외교를 강조하고, 이에 적합한 인물로 후쿠다 야스오를 부각시킬 경우.
불리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총재 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고이즈미 정권의 동아시아 외교 실패에 대한 비판이 여론화 될 경우. ○고이즈미 총재의 정치적 영향력이 저하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재선거와 관련, 고이즈미 칠드런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취약할 경우. ○차기 정권의 정책과제와 관련, 총리의 정책역량·정치적 역량이 중요시될 경우. ○자민당내 중견 정치인들의 세대교체를 우려하는 의견이 강해 질 경우. ○언론이 국익을 위한 차기정권의 주요 국정국제로 동아시아외교를 중시하여, 이에 부적합한 인물로 아베 신조를 지목하고, 아베 신조의 정치자금 문제 등 부정적인 보도를 집중적으로 전개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이즈미 총재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고이즈미 칠드런 의원들의 아베에 대한 지지가 집결될 경우. ○자민당 쇄신 및 개혁을 위한 요구와 더불어 세대교체의 바람이 강하게 일어날 경우. ○미·일동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집단자위권 확보 등 안보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우익세력의 영향력이 증대할 경우. ○납치문제 등과 관련 대북 강경정책, 국제정치지도국을 지향한 ‘강한 일본(strong Japan)’의 건설 등을 위해 젊고 강력한 리더십의 요구가 있을 경우.

IV

아베정권과 국내정치



1. 아베정권의 등장

2006년 9월 20일 5년여 만에 치러진 포스트 고이즈미 자민당 총재 경선은 ‘아베 대세론’의 확산 속에 치러졌고, 예상대로 아베 신조는 아소 다로(麻生太郎) 외무장관, 타나카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재무장관 등과 경쟁에서 전체 703표 가운데 464표(66%)를 얻었다.

아베 신조는 전체의 약 2/3수준의 큰 득표력을 과시하며 제21대 자민당 총재(임기 3년)로 선출되었다(<표 IV-1> 참조).³⁶

아베 신조는 총재 당선 인사를 통해 “첫 전후 세대 총재로서 이상의 불꽃, 개혁의 횃불을 이어 받아 일본을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표 IV-1> 9·20 자민당 총재선거와 아베 신조의 득표력

	국회의원표	지방표	합계(득표율)
아베 신조	267	107	464(66%)
아소 다로	69	67	136(19%)
타나카키 사다카즈	66	36	102(15%)

출처: 『毎日新聞』, 2006년 9월 21일.

그리고 아베 신조는 26일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선거에서 총 475표(각각 339표, 136표)를 획득하여 251표를 얻은 제1야당 오자와 이치로 대표를 누르고 제90대 총리로 선출되었다. 정치 명문가의 출신으로 1993년 첫 중의원에 당선된 5선의 아베 신조(52세)는 2006년 9월에 첫 전후세대의 총재·총리이자 전후 최연소

³⁶ 『毎日新聞』, 2006년 9월 21일.

총재·총리로 등장하였다.

아베 총리는 2006년 9월 26일 내각의 정식 출범에 앞서, 먼저 자민당의 집행부를 <표 IV-2>와 같이 구성한 뒤, 이어 <표 IV-3>과 같은 내각을 발족하였다.

자민당 집행부의 경우, 아베 총리의 최측근 인물들이 간사장, 총무회장, 정무조사회장 등 당 3역을 비롯한 요직에 배치되었다. 아베 총리는 <표 IV-2>와 같이, 간사장에 나카가와 히데오(中川秀直) 정무조사회장, 총무회장에 니와 유야(丹羽雄哉) 전 후생장관, 정무조사회장에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전 농림수산 장관 등을 임명하였다.³⁷

<표 IV-2> 자민당 3역 인사

간사장	나카가와 히데오	○전 정무조사회장, 전 관방장관 ○아베 총리의 신뢰가 깊은 후견인
총무회장	니와 유야	○전 후생장관 ○당내 3대 파벌로서 제일 먼저 아베 후보를 지지한 니와·고가파를 배려한 농공행상 인사
정무조사회장	나카가와 쇼이치	○전 농림수산장관 ○아베 총리의 단짝 인물 ○후소사관 역사왜곡교과서를 지지하는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들의 모임’ 회장

출처: 『朝日新聞』, 2006년 9월 24日(夕刊).

그리고 아베 총리는 내각의 구성 역시 정국 주도력의 강화를 꾀했는데, 아베 내각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아베 총리는 정국 주도력의 강화를 위해 친정체제의 구축을

37- 『朝日新聞』, 2006년 9월 25日.

지향하는 내각을 발족하였다. 각 파벌에 각료직을 적절히 안배하되 자신의 총재 행보에 반대하였던 파벌에 대해서는 내각 구성에서 배제하였다. 즉, 아베 총리는 논공행상에 따른 인선을 하면서 노·장·청의 조화를 꾀하는 한편, 총재 경선과정에서 충성심을 보였던 측근 인사들을 각료로 기용하여 친정체제의 구축을 도모하였다.

둘째, 내각 2인자인 관방장관 겸 납치문제 담당 장관에 임명된 최측근으로 정책통인 시오자키 외무성 부장관, 방위청 장관에 임명된 전 자민당 총무회장·방위청 장관 출신의 중진 ‘방위족’ 규마 후미오, 문부과학장관에 임명된 8선의 이부키 분메이 이부키·고가과의 파벌 회장, 후생노동장관에 기용된 야나기사와 하쿠오 총재선거대책본부장 등이 주목된다.

셋째, 아베 총리는 총리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총리 관저의 조직 개편과 더불어 정책보좌관제를 질적·양적으로 강화하고, 측근 소장 인물들을 총리 관저에 집중·배치하였다. 2명에서 5명으로 증가된 총리 보좌관에는 측근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의원, 나카야마 교코(中山恭子) 내각관방참여 등이 발탁되었다.

넷째, 아베 총리는 내각의 조직 장악을 지향한 관료사회의 견제를 위해 측근 민간인들을 발탁하였다. 예컨대, 경제재정담당장관에 오타 히로코라는 여성 경제학자를 발탁하였고, 관방부장관에 미토바 준조 다이와 총연 이사장을 임명하였다.

다섯째, 외무장관에는 총재경선에서 2등을 하였던 아소 다로를 유임하였고, 연립여당인 공명당에서는 후유시바 데쓰조 전 간사장이 국토교통장관으로 입각시켰다.

I
II
III
IV
V
VI

<표 IV-3> 아베 내각의 각료 명단

총리	아베 신조(安倍晉三, 52)
관방장관(납치문제담당상 겸임)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55)
외무장관	아소 다로(麻生太郎, 66)
방위청장관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65)
재무장관	오미 코지(尾身幸次, 73)
경제재정담당장관	오타 히로코(大田弘子, 52)
총무장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57)
경제산업장관	아마리 아카리(甘利明, 57)
금융담당장관	야마모토 유지(山本有二, 54)
농림수산장관	마쓰오카 도시카츠(松岡利勝, 61)
법무장관	나가세 진엔(長勢甚遠, 62)
문부과학장관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68)
후생노동장관	야나기사와 하쿠오(柳澤伯夫, 71)
국토교통장관	후유시바 데쓰조(冬柴鐵三, 70)
환경장관	와카바야시마사토시(若林正俊, 72)
국가공안위원장	미조테 겐세이(溝手顯正, 64)
행정·규제개혁담당장관	사다 겐이치로(佐田玄一郎, 53)
오키나와·북방담당장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64)

출처: 『朝日新聞』, 2006年 9月 25日.

2. 아베정권의 국내정치 특징

가. 전후체제 탈피의 개혁정치

자민당의 보수 우익 성향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보수 우익성향의 정치세력들은 전쟁 책임과 죄의식, 패배주의적 역사의식 등에 의한 콤플렉스, 자학적 성향을 타파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전후 체제의 탈피를 주창해 왔다.

전후체제라는 것은 연합군 총사령부(GHQ)의 점령통치 아래 마련된 평화헌법³⁸을 바탕으로 구축된 체제를 의미하므로, 전후체제의 탈피는 곧 현행 평화헌법의 굴레를 벗어나 정상적으로 군대 등을 보유하는 소위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전후체제의 탈피를 아베 총리는 정권의 목표로써 내세웠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역사·전통·문화를 존중하고 애국심을 함양하는 교육을 통해 국가의 재구축하고, 나아가 강한 국가의 건설을 추구해 갈 것을 역설했는데, 정권의 목표로서 ‘전후체제의 탈피’를 기치로 내걸고 개혁정치를 전개하였다.

그 결과, 아베 총리는 집권 3개월만에 국회에서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방위청의 성(省) 승격 법안’을 성립시켰고, 나아가 국민투표법의 성립과 더불어 헌법개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³⁸ ‘맥아더 헌법’이라고도 불리는 평화헌법은 일본을 군국주의 국가로부터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시키기 위해 국민주권주의,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으며, 전쟁포기·군비 및 교전권 부정, 상징 천황제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1) 교육기본법의 개정

연합군 총사령부(GHQ)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타파하고 민주주의 국가로 재탄생시키는 개혁의 일환으로 교육개혁을 단행하였다. 즉, 연합군 총사령부(GHQ)는 1947년에 일본 군국주의를 떠받쳤던 황국 신민 교육의 요체인 ‘교육칙어(教育勅語)’를 부정하는 ‘교육기본법’을 제정하였다.

1890년에 발령된 ‘교육칙어’는 메이지 천황(明治天皇)이 근대화를 위한 교육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황국신민교육의 강화를 위해 일종의 국민들에게 충·효를 강조하는 사상 훈시였는데,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 기간 중에 각 학교에서 봉독되었고, 군국주의를 위한 일종의 이념 교육으로 기여하였다.

따라서 연합군 총사령부(GHQ)는 일본 군국주의의 해체와 더불어 전후 일본의 민주화를 위한 점령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주권의 확립 차원에서 ‘교육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일본의 보수 우익 정치세력은 일본 국민들의 자학적 역사관·국가관의 형성에 ‘교육기본법’의 영향이 있다고 인식해 왔고, 따라서 ‘교육기본법’의 개정을 주장해 왔다.

이와 같은 주장은 아베 총리의 개혁정치에 의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아베 총리는 2006년 9월 20일 자민당 총재에 선출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정권의 개혁과제 교육개혁을 최우선시할 것을 강조하였는데,³⁹ 2006년 12월 15일의 임시국회에서 야당, 일본교원노조(日教組)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였다.⁴⁰

³⁹- 『毎日新聞』, 2006年 9月 21日.

⁴⁰- 『毎日新聞』, 2006年 12月 16日.

개정된 교육기본법의 핵심 부분은 <표 IV-4>와 같은데, 교육목표에 애국심의 고양을 위하여 일본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규정한 것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21세기 국제지도국을 지향한 강한 일본의 건설을 향해 보통국가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과거사에 대한 콤플렉스의 해소, 국가에 대한 자긍심의 고양 등을 도모하려는 보수적 정치 세력들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표 IV-4> 개정된 교육기본법의 핵심부분

	개정전	개정후
전문(前文)	개인의 존엄을 존중	공공정신(公共精神)을 존중, 전통을 존중
교육목표	평화적 국가·사회 형성자로서 건전한 국민 육성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육성해 온 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 함양

출처: 『毎日新聞』, 2006년 12월 16일.

(2) 방위청의 성(省)으로의 승격

전후 일본의 출발과 더불어 재군비도 추진되었다. 1954년 7월에 방위관계법의 시행과 함께 방위청이 설치되고 육상·해공·항공 3자위대가 발족하였다.

그런데 자위대가 ‘정식 군대’로 규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관장할 방위청도 독립부처가 아닌 내각부 산하의 외청으로 출범하였다. 따라서 방위청은 총리 및 내각부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 법률안이나 안건 등을 각료회의에 제출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자민당 정권은 1955년 출범이래 계속해서 방위청의 성으



로의 승격을 추진하였다. 그와 같은 작업은 탈냉전시대에 접어들어 미·일동맹의 강화와 더불어 유사법의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한층 탄력 있게 전개되었다.

특히, 고이즈미 정권의 안보개혁의 추진에 의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는데, 마침내 아베정권의 개혁정치의 일환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아베 총리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방위청의 성(省) 승격을 추진한 결과, 2006년 1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성립되었고, 방위청은 2007년 1월 9일부터 방위성으로 승격되었다. 이로써 방위성은 다음과 같은 권한이 강화되게 되었다.

첫째, 독립부서가 됨에 따라 독자적 법률안 및 중요 안건의 각료회의 제출, 예산요구 및 집행·인사권 행사, 성령(省令) 제정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독립부서가 됨에 따라 그동안 외무성이 영향력을 행사해 온 자위대의 해외파견 등 주요한 안보정책의 주도적 권한을 이관 받게 되었다.

이처럼 안보정책의 소프트 파워의 증강을 위해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킨 아베 총리는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와 같은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의 창설도 추진하였다.

아베 총리가 의장인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관저 기능의 강화회의」는 2007년 2월 27일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창설을 위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⁴¹ 즉,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관저 기능의

41. 『讀賣新聞』, 2007年 2月 28日.

강화회의』는 안보정책의 종합적·전략적 기획·입안을 위한 체제 정비를 위해 현행의 안전보장회의를 미국의 NSC와 같은 국가안전보장회의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총리·관방장관·외무장관·방위장관·총리안보보좌관 등으로 구성되는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008년에 공식 발족될 예정이었으나, 7·29 참의원 선거 대참패의 후유증으로 신설이 보류되었다.⁴² 즉, 7·29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대참패로 인해 제1야당인 민주당의 참의원 장악과 함께 법안 가결이 어려워지게 된 상황에서, 후쿠다 내각과 자민당이 긴급 현안인 테러대책특별법의 해결에 역점을 두게 됨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신설은 보류하게 된 것이다.

(3) 집단적 자위권의 용인을 위한 연구자문그룹 발족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일본은 헌법 9조의 1항의 ‘전쟁포기’ 2항의 ‘전력 불보유 및 교전권 부인’ 등으로 인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보수·우익 그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단적 자위권 허용 논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자민당 헌법조사회는 1973년 5월 헌법 9조의 개정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 대강’을 발표하면서 공론화를 시도하였으나, 야당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⁴² 『東京新聞』, 2007年 10月 8日.

I
II
III
IV
V
VI

이후, 1992년 6월 ‘PKO 협력법’이 제정되고 1992년 9월에 전후 최초로 자위대가 캄보디아에 파견되어 활동을 전개하면서 재차 부각되었다. 즉, 자위대와 함께 활동하는 외국군대를 보호하기 위한 무기사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면서 집단적 자위권 허용 문제가 재차 부각되었다.

그리고 1998년 8월 북한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 사건’의 영향을 받아 일본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고조되면서 집단적 자위권 허용논의도 고조되었다.

미국도 「제1차 아미티지 보고서」라고 불리는 「미국과 일본: 성숙된 동반자를 지향한 진보」(*The Unti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 2000)⁴³ 등에서 미·일동맹의 강화와 아·태지역에서의 일본의 전략적 역할 확대를 위하여 일본의 집단 자위권이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의 대테러전 지원을 위해 일본은 2004년 1월 최초로 자위대를 분쟁지역인 이라크에 파병하였는데,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집단자위권의 실질적 행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

일본은 헌법해석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허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고, 자민당은 2005년 8월 1일 발표한 「헌법개정 시안」에서 집단적 자위권은 헌법에 명기치 않고 해석을 통해 허용한다는 방

⁴³-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y Studies, *The Unti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 (October 2000.10). 동 보고서는 미국 국방대학(NDU)이 포스트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2001.1)에 대비하여 구성한 초당적 연구그룹에 의해 작성되었다. 초당적 연구그룹에는 공화·민주당 행정부에서 국방차관보를 역임한 Richard L. Amitage(1983~86), Joseph S. Nye(1994~95)를 비롯하여 CRF의 Michael J. Green 연구원 등 총 16명의 아시아 전문가들이 참가하였다. 따라서 일명 「아미티지 보고서」(Amitige Report)라고도 불리고 있다.

침을 명백히 하였다.⁴⁴

그리고 아베정권은 전후체제 탈피의 개혁정치 차원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허용문제를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하였다. 즉, 아베정권은 전면적 헌법해석 변경 시에 야권 등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제한적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아베 총리는 2007년 4월 25일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검토할 총리 자문기구로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전격 발족시켰다. 즉, 아베 총리는 동년 4월 27일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일동맹의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연구회’를 발족시킨 것이다.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전 미국대사를 좌장으로 하는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을 위한 간담회』는 집단적 자위권의 연구와 관련하여 ‘행사 금지’ 원칙의 폐기가 아니라, 현행 헌법해석을 유지하면서 MD 등 미·일동맹과 관련된 특정사례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그리고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을 위한 간담회』는 중점 연구대상을 ①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 미국을 향할 경우, ② 공해상 공동훈련중인 타국함선이 공격받을 경우, ③ 해외활동시 공동으로 활동 중인 타국부대가 공격을 받을 경우, ④ PKO 활동시 저항세력 등이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등 4가지 유형으로 상정하고, 각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자위대의 반격 허용 범위, 반격이 허용되는 사례, 자위대 반격시 법리적용 문제 등에 대해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⁵

44. 배정호, 『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서울: 나남, 2006), 제8장.

45. 『東京新聞』, 2007年 4月 26日.



그러나 7·29 참의원선거의 자민당 대참패와 아베 총리의 퇴진이 후,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의 용인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었다. 후쿠다 총리는 2007년 10월 9일 국회연설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용인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4) 국민투표법의 성립과 헌법개정 노력의 강화

연합군 총사령부(GHQ)의 점령통치 아래 제정된 현행 평화헌법은 1947년 5월부터 시행된 이래 60여년간 개헌 논의를 전개해 왔지만, 구체적인 국민투표 방법과 절차 등은 미비한 상태에 있었다. 즉, 헌법 96조에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가 국회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 국민투표 결과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2000년 1월 국회내 헌법조사회의 설치를 계기로 여야 정치권은 개헌 논의의 활성화와 더불어 구체적인 국민투표 방법과 절차 등 포함한 국민투표법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 결과 자민·공명 연립정권과 제1야당 민주당은 각각 국민투표법안을 마련하여 2006년 5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자민·공명 연립정권의 제출 법안은 개헌만을 국민투표 대상으로 하자는데 비해, 제1야당 민주당의 제출 법안은 주요 국정 현안도 국민투표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자민·공명 연립정권은 제1야당 민주당과 절충안 마련을 위해 협상을 전개하였으나, 어렵게 되자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통과시켰다. 즉, <표 IV-5>와 같은 헌법 개정의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안을 2007년 4월 13일 중의원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가결시켰다.⁴⁶ 이어 동년 5월 14일 참의원에서 최종적으로 성

립시켰다.

국민투표법의 성립으로, 개헌 추진에 있어 ‘절차법 결여’는 해결되었다. 국민투표법은 공포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시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2010년부터 개헌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아베정권에 의해 일본은 개헌의 막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표 IV-5> 『국민투표법』의 주요 내용⁴⁷

국민투표 대상 및 투표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표대상은 헌법개정에 한정 ○투표권자 만 18세 이상 ○투표일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 날로부터 60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회가 정하는 날에 실시
선거운동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및 교사의 지위 등을 이용한 국민투표운동을 금지 ○TV 등 매체를 이용한 의견 광고는 투표일전 2주간 금지
개헌안 승인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찬성이 유효투표 총수를 기준으로 1/2를 넘을 경우 개헌안을 승인 ○백표 등을 포함한 무효표는 유효투표 총수에서 제외
법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투표법은 공포로부터 3년 경과 후 시행 ○중·참 양원에 개헌발의권을 가진 헌법심사회를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시행시까지의 헌법개정안의 심사·제출 등의 활동 동결, - 조사활동은 허용

I
II
III
IV
V
VI

⁴⁶- 『毎日新聞』, 2007年 4月 13日.

⁴⁷- 『毎日新聞』, 2007年 4月 13日; 『讀賣新聞』, 2007年 4月 14日; 『日本經濟新聞』, 2007年 4月 14日 및 4月 17日.

나. 파벌정치의 부활

2001년의 4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당내 최대 파벌의 회장인 하시모토 류타로와 경쟁을 벌였는데, 취약한 당내 기반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일본개혁, 자민당 개혁’을 기치로 내세웠다.

따라서 총재·총리로 등장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국주도력의 강화를 위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자민당 파벌의 무력화와 역학 구도의 재편을 시도하였다. 즉, 고이즈미 총리는 내각 구성 및 자민당 인사 등에서 ‘탈파벌화’를 추구하였다.⁴⁸

그 결과, 고이즈미 총리의 권력기반 및 친정체제가 강화되어 가는 가운데 자민당의 파벌 영향력은 점점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고이즈미 정권의 5년여 집권 동안, 자민당 파벌은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히 약하게 되었다.

이처럼, 무력화된 자민당의 파벌이 아베 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재차 부활하는 조짐을 나타내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2006년 9월 출범 당시에는 60%대의 중반이상이었으나, 점차 하강곡선을 그리다가 2007년에 접어들어서는 30%대까지 하락하게 되었고, 4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지율의 하락은 2007년 7월 ‘참의원 선거의 부진’이라는 부정적 전망과 함께 선거결과를 둘러싸고 권력게임이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아울러 당내 반 아베진영의 세력결집을 가속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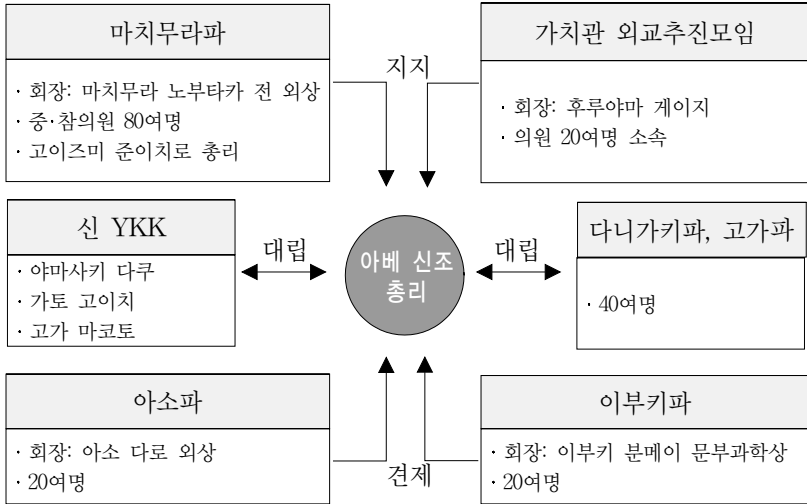
예컨대, 자민당내에는 아마자키 다쿠 전 부총재·가토 고이치 전 간

⁴⁸ 배정호, 『최근 중·일관계가 갈등요인 분석』, II장.

사장·고가 마코토 전 간사장 등이 중심인 ‘신YKK’ 그룹은 7·29 참의원 선거의 결과에 따라 ‘아베 퇴진’을 기획하며 결속을 강화하였고, 아소 다로 외무장관이 회장인 아소파도 포스트 아베정권을 대비하여 세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이에 대응해 친아베파도 세력 결속을 추구하였다.

‘친 아베진영 대 반 아베진영’의 관점에서 본 자민당 내 파벌 역학 관계는 <그림 IV-1>과 같다.

<그림 IV-1> 자민당 내 파벌 역학 관계도



출처: 『세계일보』, 2007년 5월 22일.

<<http://www.segye.com/Service5/ShellView.asp?TreeID=1052&PCode=0007&Data=200705221639000317>>.

자민당 파벌의 부활 조짐, <그림 IV-1>와 같은 자민당의 파벌 역학 구도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아베 신조는 당내 권력기반을 바탕으로 치열한 권력게임을 치루지 않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정치적 후원아래 2006년의

I
II
III
IV
V
VI

7·5 북한 미사일 발사 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아베 대망론’에 힘입어 총재·총리로 등장하였다. 이는 광범한 소극적 지지기반은 있으나, 당내 공고한 권력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즉, 아베 총재·총리의 자민당 권력의 장악이 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아베 총리가 국민연금의 기록 누락,⁴⁹ 정치비리에 연루된 각료의 자살,⁵⁰ 정권의 도덕성 하락 등으로 내각 지지율이 30%대까지 하락하게 되자, 7·29 참의원 선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나타났고, 결과에 따라서 총리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전망되었다. 이는 7·29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할 경우, 반 아베 진영에 의한 정치적 공세와 함께 여야의 공동전선에 의해 총리 퇴진론이 부각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 YKK’ 등 반 아베 파벌의 결속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즉 포스트 아베를 겨냥한 권력게임에 대비한 세력결속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3. 7·29 참의원 선거와 자민당의 대참패

가. 참의원 선거 방식 및 정치적 의미

일본의 참의원은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을 견제·보완하는 상원의 역할을 한다. 법안의 심의는 중의원·참의원 양원에서 하며 별도로 이루어지는데, 중의원·참의원 양원의 의견이 다를 경우, 양원협의회

49- 사회보험청은 1997년 전산화 과정에서 50,590,000건의 국민연금 납부기록을 누락하였고, 이로 인해 약 950억 엔 상당의 연금 미지급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대정부 불신은 증폭되었다.

50- 마츠오카 농수산장관은 2006년 9월 내각의 출범이후 줄곧 불투명한 정치자금 처리문제로 사회 압력을 받아왔는데, 새로운 정치헌금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2007년 5월 28일 자살하였다. 이 사건으로 아베정권은 도덕성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되었다.

를 열어 타협점을 모색한다. 그리고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이 참의원
에서 부결되었을 경우, 중의원에서 출석 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재
의결되어야만 법안 성립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일본의 양원제에서 참의원은 정원 242석에 임기가 6년
이고, 참의원 선거는 매 3년마다 정원의 1/2를 교체·선출하며, 선거구
는 중선거구·비례대표제이다(<표 IV-6>참조).

중의원(정원 480석, 임기 4년)의 선거 결과는 정권교체로 이어지지
만, 참의원 선거는 정권의 선택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결과가 정
권교체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집권당이 참의원에서 과반수 확
보에 실패할 경우, 법안 성립의 어려움 등 국정 운영에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 즉, 집권당이 국정운영에 필요한 법안을 중의원에서 통과시
켜도 참의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 IV-6> 참의원 선거 방식

선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구: 전국 47개 중선거구(1~5인) ○ 비례대표: 비(非)구속 명부식 비례대표(전국 단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정당이 자당 비례대표 명부에 후보 순위를 미리 정하지 않고 등재하는 방식
투표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장의 투표용지에 지역구 후보 이름과 비례대표 정당명 또는 후보자명을 각각 기입

나. 아베 내각의 지지율 하락과 7·29 참의원 선거

아베 총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후체제의 탈피를 기치로
내걸고 개혁정치 차원에서 교육기본법 개정, 방위청의 성으로의 승
격, 집단적 자위권 용인의 적극적 접근, 국민투표법 성립 등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였으나, 격차사회의 해소 등 민생정치를 소홀히 하게 됨

I
II
III
IV
V
VI

에 따라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누적되고 지지율은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아베 총리의 국민연금의 기록 누락, 정치비리에 연루된 각료의 자살과 정권의 도덕성 하락 등으로 인해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더욱더 하강곡선을 나타내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표 IV-7>처럼, 2007년 5월 26~27일 조사부터 지지보다 부지지율이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7월에 접어들면서 28%까지 하락하였다.

<표 IV-7> 아베내각의 지지율의 변화

구분	06년 9월	11월	12월	07년 2월	4월 14· 15일	5월 12· 13일	5월 26· 27일	6월 9· 10일	6월 16· 17일	6월 23· 24일	6월 30일· 7월 1일
지지	63%	53%	40%	40%	40%	43%	36%	34%	32%	31%	28%
부지지	18%	21%	37%	37%	37%	33%	42%	48%	51%	48%	48%

*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여론조사를 참조하여 작성함.

그러므로 7·29 참의원 선거는 아베정권에 대한 신임투표 성격을 띠게 되므로, 국내외의 높은 관심이 모아졌으나, 선거전은 ‘자민당의 패배’가 전망되는 분위기 속에서 전개되었다.

아베 총리는 가두연설·시민행사 참석 등을 통하여 국민들과의 접촉 기회를 대폭 늘리는 한편, 도쿄대학 암 치료센터 시찰·모내기 체험 등을 통하여 ‘서민형 총리상’을 연출하면서 국민지지의 회복을 도모하였으며, ‘성장을 실감하게’라는 슬로건아래, ‘아름다운 국가 일본’을 향한 155개의 공약을 제시하였다.

아베 총리는 당초 원안과는 달리 헌법개정보다 연금개혁을 최우선시 하는 민생현안을 공약 전면에 내세웠고, 공무원제도·교육개혁

관련 법안 조속 처리 등을 통해 개혁 자세를 부각시키면서 민심잡기에 주력하였다.

게다가, 아베정권은 7·29 참의원 선거에 ‘일본판 북풍’까지 전략적 활용을 시도하며 유권자의 지지 회복을 추구하였다. 모리 요시로 전 총리,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 등은 7월 25일 도쿄 시대 가두연설에서 “여당이 패배하면, 즐거워하는 것은 김정일뿐”이라며 ‘일본판 북풍’의 활용을 시도하였다.

반면, 제1야당 민주당은 참의원 선거의 압승을 통해 중의원 해산 압박 및 정권교체를 추구한다는 전략아래 연금관리 부실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였다. 특히,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는 ‘참의원 선거 과반수 획득 실패시, 정계은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정권교대 가능한 2대 정당제’를 주장하며 ‘민생 우선’ 전략으로 선거를 총괄 지휘하였다.

이처럼 7·29 참의원 선거는 ‘자민당 대 민주당’의 대결아래 정치스캔들·연금문제 등을 쟁점으로 하며, <표 IV-7>과 같은 아베 내각에 대한 국민지지율의 하락과 함께 자민당의 패배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개되었다.

그 결과, 7·29 참의원 선거는 자민당의 대참패, 민주당의 압승으로 나타났다. 7·29 참의원 선거의 결과 및 참의원 의석 분포는 <표 IV-8>에 나타난 바와 같다. 즉, 자민당 27석 감소, 민주당 28석이 증가함으로써 자민당은 과반수 의석에 미달하게 되고, 민주당은 참의원의 제1당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I
II
III
IV
V
VI

<표 IV-8> 7·29 참의원 선거와 참의원 의석 분포⁵¹

정당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공산당	사민당	국민신당	무소속 등 기타
개선(改選)대상 의석(결원 2석)→획득 의석(의석 증감)	64→37 (-27)	32→60 (+28)	12→9 (-3)	5→3 (-2)	3→2 (-1)	2→2 (0)	1→8 (+7)
개선 대상 아닌 기존 의석(총 121석)	46	49	11	4	3	2	6
선거 후 의석분포(총 242석)	83	109	20	7	5	4	14

* 참의원 임기는 6년이며, 3년에 한 번씩 임기가 만료되는 절반 의석(121석)을 개선.

7·29 참의원 선거의 특징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⁵²

첫째, 민주당은 지지정당 없는 부동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의 출구조사에 의하면, 자민당 지지층의 21%, 지지정당 없는 층의 51%가 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⁵³

둘째, <표 IV-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책임정치가 구현되는 1인 선거구에서 민주당 압승하였고, 비례득표에서도 민주당 2004년 선거 시보다 200만표 이상 증가한 2,326만표를 획득하여 20석을 점유하게 되었다.

셋째, 민주당의 선거구 당선자의 62.5%가 30~40대의 소장파이다. 이는 약간의 신인들이 자민당의 현역의원들과 대결하여 승리한 것을 의미한다.

51- 『朝日新聞』, 2007年 7月 30日(夕刊); 『讀賣新聞』, 2007年 7月 30日(夕刊); 『毎日新聞』, 2007年 7月 30日(夕刊).

52- 배정호,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7).

53- 『朝日新聞』, 2007年 7月 30日.

<표 IV-9> 7·29 참의원 선거와 자민 대 민주의 대결 결과⁵⁴

	자민 VS 민주	비 고
7·29 참의원 선거 후 의석수	83 VS 109	○선거전 자민 VS 민주가 110 대 81이었으나, 완전 역전됨. ○무소속까지 포함하면 여야의 의석 차는 29석
1인 선거구	6 VS 17	○책임정치가 구현되는 1인 선거구에서 민주당의 압승은 정치적 의의 큼. ○2이상의 복수 선거구의 자민 VS 민주는 17 대 23
비례 득표	1,654만 VS 2,326만	○비례구 의석수의 자민 VS 민주는 14 대 20
당선자의 평균 연령	53.9 VS 50.3	○민주당의 선거구 당선자의 62.5%, 30~40대의 소장파 - 즉, 소장 신인들이 자민당의 현역 의원들과 대결하여 승리

다. 자민당의 패배 요인

자민당의 대참패의 근본 요인은 <표 IV-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베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대정부 불신이 증대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국정운영에 있다. 즉, 정치스캔들과 정권의 도덕성 실추,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 중시, 연금문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대정부 복합적 불신의 증폭이 7·29 참의원 선거에서 분노가 분출되어 자민당의 대참패를 가져왔다고 지적할 수 있다.

(1) 정치스캔들과 정권의 도덕성 실추

아베정권은 출범시 논공행사에 따른 인사, 소위 ‘코드인사’에 따른

⁵⁴ “數字で見る自民VS民主” <<http://www.asahi.com/senkyo2007>>.

측근들의 요직 배치 등의 인사로 인하여 인사검증을 소홀히 하게 되었는데, 결국 각료들의 잇단 정치자금과 스캔들이 야기되면서 정권의 도덕성 하락을 초래하였다.

아베정권 등장 이후, 정치자금 스캔들에 의한 사다 겐이치로 행정 개혁담당장관의 사임, 정치자금 스캔들에 의한 마쓰오카 도시카쓰 농수산장관의 자살, 후임 아카기 노리히코 농수산장관 마저 정치자금 스캔들 파문 등 <표 IV-10>와 같은 정치 스캔들이 초래되었다. 이는 국민들의 대정부 불신으로 귀결되면서, 7·29 참의원 선거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표 IV-10> 아베정권의 정치 스캔들⁵⁵

이름	시기	내용	총리입장 →결과	총리 발언 및 태도
혼마 마사아키 정부 세계문제 조사회장	2006년 2월	관사에서 내연녀와 동거	옹호→사임	“(조사회장으로서의)일을 완수함으로써 책임져야”
사다 겐이치로 행정 개혁장관	2006년 12월	정치자금 허위보고	비난→사임	“국민에게 직접 설명 해야”
마쓰오카 도시카쓰 농수산장관	2007년 1월	사무실 경비 허위 계상	옹호→자살	“적법적으로 처리해야”
규마 후미오 방위장관	2007년 6월	“원폭투하 어쩔 수 없었다” 망언	옹호, 주의→사임	“그런 뜻이 아닌 걸로 안다”
아카기 노리히코 농수산장관	2007년 6월	불투명한 사무실 경비처리 등 정치자금	경질시기를 놓치고, 7·29 참의원 선거 패배후 8월 1일 사임	7·29 참의원 선거 패배 후, 비판여론에 밀려 경질

55. 배정호,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2)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 중시

아베정권은 민생중시의 정책보다 전후체제 탈피에 역점을 둔 교육 개혁, 안보개혁, 헌법개정 등을 최우선시하였다. 즉, 아베정권은 민심과 동떨어지게 일본사회의 양극화 심화 해소 등 민생정책과제에 소홀히 임하였고, 도시지역 위주의 경기회복에 의한 중앙-지방의 격차 문제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

이에 국민들은 아베정권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게 되고, 불만이 누적되면서 7·29 참의원 선거를 통하여 ‘자민당 부지지’로 표출되었다.

(3) 연금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경솔한 대응

연금기록 분실 문제와 관련, 민주당은 2007년 국회 차원에서 감사 실시를 주장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다”며 이를 무시하였다. 이에 국민들은 연금 수령액의 축소를 우려하며 정부 불신을 강하게 표출하였다.

아베 총리는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회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대책마련에 부심하였고, 2007년 6월 3일 도쿄의 가두연설에서 “연금 기록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이 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고 머리를 조아리며, “1년 내 분실 기록을 정리해 마무리하겠다”고 정공법으로 나왔다.

시기를 상실한 아베 총리의 대책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비판·분노의 여론을 수습하는데 한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7·29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에 대한 비판으로 표출되었다.

I

II

III

IV

V

VI

(4)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의 정치력에 대한 경시

야당 지도자로서 세대교체 의 분위기의 영향 속에 다소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오자와 이치로가 제1 야당 민주당 대표로서 포스트 고이즈미 시대로의 전환기에 재차 적극적인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면서, 일본 정계는 ‘자민당 대 민주당의 대결구도’ 아래 다소 긴장감이 조성되었는데, 7·29 참의원 선거 직전, 아사히 신문이 7월 21~22 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⁵⁶ 오자와 이치로 대표의 리더십과 개혁력이 아베 총리보다 높게 평가되었다(<표 IV-11>참조).

오자와 이치로 대표는 ‘과반수이상의 의석 불획득시, 정계은퇴’라는 정치생명을 걸고, 7·29 참의원 선거를 총괄 지휘하였다.

오자와 대표의 정치력과 리더십이 민주당의 압승을 가져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IV-11> 아베 총리와 오자와 대표의 리더십 평가

구 분	조사 시기	아베 총리	오자와 대표
리더십	2007. 5. 26~27	31%	43%
	2007. 7. 21~22	31%	50%
정책 호소력	2007. 5. 26~27	41%	33%
	2007. 7. 21~22	37%	40%
개혁력	2007. 5. 26~27	33%	34%
	2007. 7. 21~22	31%	45%

출처: 『朝日新聞』, 2007年 7月 23日.

⁵⁶ 『朝日新聞』, 2007年 7月 23日.

4. 아베 총리의 퇴진

7월 29일 참의원 선거의 결과는 각 언론사의 출구조사에 의해 참패로 예측되었다. 그 같은 예측이 개표의 시작과 함께 현실로 다가 오기 시작하면서, 모리 요시로 전 총리, 아오키 미키 오 참의원 의장, 나가사와 히데나오 간사장 등 당 핵심 인사들은 개표 진행 중에 총리 관저를 방문하여 아베 총리에게 용퇴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선거 판세가 거의 확정된 7월 29일 밤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의 완성을 위해 ‘총리직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즉, 아베 총리는 퇴진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였다.

1989년 7·23 참의원 선거 참패후의 우노 총리의 퇴진, 1998년 7·12 참의원 선거 참패후의 하시모토 총리의 퇴진 사례가 있으나, 참의원 선거의 결과에 따른 사임은 ‘정치적 책임’에 의한 ‘정치적 사임’이므로, 총리의 의사에 따라 반드시 사임으로 귀결되지 않을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정치적 책임은 느끼지만, 용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참의원 과반수 의석의 확보 실패로 인해 아베 총리의 향후 개혁을 향한 정국 운영은 용이하지 않고, 강한 리더십의 발휘도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표 IV-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민당은 중의원의 2/3 의석수(32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었을 경우,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되어야만 법안 성립이 가능한데, 연립정당인 공명당의 적극적 지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즉, 아베 총리는 정치력, 정국 주도력 여하에 따라 소위 ‘식물 총리’로 전락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I
II
III
IV
V
VI

<표 IV-12> 일본 중의원 의석 분포(2007년 8월 시점)

정당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공산당	사민당	국민신당	무소속 등
의석분포 (480석)	306	113	31	9	7	4	10

제1야당 민주당은 ‘아베 총리의 사퇴와 중의원 조기 해산 및 총선거 실시’를 주장하였지만, 국민들도 ‘아베 총리의 즉각 퇴진’이나 ‘아베 총리의 사퇴와 중의원 조기 해산 및 총선거 실시’ 등에 대해 다소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었다.⁵⁷

따라서 아베 총리는 일단 정국 수습을 위해 당 3억 인사와 함께 내각 개편을 단행하였다. 아베 총리는 정국운영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당내 퇴진 요구를 무마해야 되고, 외부적으로는 참의원에서 오자와 이치로 대표의 민주당이 주도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각 파벌의 영수들을 비롯한 당내 실력자들을 당·정의 주요 요직에 기용하였다.

아베 총리는 2007년 8월 27일 오전에 <표 IV-13>과 같은 당 3억 인사를 단행하였다. 즉, 간사장에 아소 다로, 총무회장에 니카이 도시히로, 정무조사회장에 이시하라 노부테루를 기용하였다.⁵⁸ 이어, 아베 총리는 동일 오후에 코드 내각인 소위 ‘친구내각’ 을 탈피하여 <표 IV-14>과 같이, 내각을 대폭 개조하였다. 아베 총리는 이부키 문부과 학장관, 오다 경제재정장관 등 5명의 각료만 유임시키고, 그 외 각료는 모두 교체하였다.⁵⁹

57- 『朝日新聞』 및 『讀賣新聞』 2007년 8월 1일에 보도된 여론조사.

58- 『朝日新聞』, 2007年 8月 27日(夕刊).

59- 『朝日新聞』, 2007年 8月 28日.

<표 IV-13> 자민당 3역 인사

간사장	아소 다로(麻生太郎, 66)	○아소파 영수 ○전 외무장관, 전 정무조사회장
총무회장	니카이 도시히로	○니카이파 영수 ○전 국회대책위원장, 전 경제산업장관
정무조사회장	이시하라 노부테루	○무파별 ○국토교통장관

출처: 『朝日新聞』, 2007년 8월 27일(夕刊).

아베정권의 당·정 개편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아베 총리는 거당체제를 지향하여 무파별의 요사노 가오루를 관방장관에 기용하는 등 각 파별의 영수, 실력자들을 내각의 각료에 임명하였다. 2006년 9월 당·정 인사의 경우, 아베 총리는 정국 주도력의 강화를 위해 친정체제의 구축을 지향하여 자신의 총재 행보에 반대하였던 파별에 대해서는 내각 구성에서 배제하고, 측근 인사들을 당·정의 요직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내각개조에서 아베 총리는 당내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타나카키(谷垣)파별을 제외한 각 파별의 영수급의 중진들을 내각에 참여시켰다.

둘째, 아베 총리의 경제성장노선에 비판적이었던 인사들을 기용하였다. 즉, 아베 총리는 7·29 참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지방 경시’ 비판 등을 의식하여 요사노 가오루 전 정무조사회장을 관방장관에 기용하고, 마스다 히로야 전 이와데현(岩手縣) 지사를 총무장관으로 등용하였다. 이는 고이즈미 정권을 계승한 아베정권의 구조개혁노선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아베 총리의 존재감이 약화되었다. 즉, 당·정 인사에서 아베 총리의 측근인사인 나카가와 히데오 간사장, 나카가와 쇼이치 정무조사회장, 다카이치 사나에 오키나와·북방 장관 등이 퇴진하고, 당내

I
II
III
IV
V
VI

각 파벌의 실력자들이 당·정의 요직에 포진함으로써 아베 총리의 색 깔이 약화되었다. 이는 아베 총리의 당정 장악력의 약화로 귀결될 수 있다.

<표 IV-14> 아베 개조내각의 각료 명단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52)
관방장관(납치문제담당상 겸임)	요사노 가오루(与謝野馨, 69)
외무장관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58)
방위청장관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65)
재무장관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63)
경제재정담당장관	오다 히로코(大田弘子, 53)
총무장관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 55)
경제산업장관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58)
금융·행정개혁장관	와타나베 요시미(渡辺善美, 55)
농림수산장관	엔도 타케히코(遠藤武彦, 68)
법무장관	하토야마 쿠니오(鳩山邦夫, 58)
문부과학장관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69)
후생노동장관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58)
국토교통장관	후유시바 데쓰조(冬柴鐵三, 71)
환경장관	와카바야시 마사토시(若林正俊, 72)
국가공안위원장	이즈미 신야(泉信也, 70)
오키나와·북방담당장관	키시다 후미오(岸田文雄, 50)
소자화(少子化) 장관	카미카와 요오코(上川陽子, 54)

출처: 『朝日新聞』, 2007년 8월 28일.

이와 같은 아베 개조내각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2007년 8월 27일 밤부터 28일 밤까지 실시한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의 전국 여론조사에 의하면, 33%가 지지, 53%가 부지지이다.⁶⁰

아베 총리의 리더십은 한계에 부딪쳤고, 정국운용의 주도권의 상당부분이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오자와 민주당 대표는 2007년 7월 31일에 금년 11월 11일부로 시한이 만료되는 ‘테러대책특별법 연장 반대’를 선언하며,⁶¹ 정국 주도권의 장악을 위해 강력한 ‘대여 투쟁전선’의 형성을 도모하였다.

이에, 아베 총리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의 연장을 위해 총리직을 걸고 대응하였다. 즉, 아베 총리는 2007년 9월 10일에 개막된 임시국회에서 ‘연장 실패시, 내각 총퇴진’이라는 배수진을 치며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의 연장을 추진하는 한편, 민주당과의 정책 타협도 전개하였으며, 오자와 이치로 대표에게 여야 당수회담도 제의하였다.

그러나 오자와 이치로 대표는 ‘테러대책법 연장 반대→총리퇴진→중의원 해산’이라는 정치전략에 따라 아베 총리의 여야 당수회담 제의를 거절하였다.

마침내, 아베 총리는 정국 운용을 위한 정치력과 리더십에 한계를 직면하고, 2007년 9월 11일 국회소신표명연설을 한 다음날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하여 총리직 사의를 표명하였다. 7·29 참의원 선거의 대참패의 후유증으로 아베내각은 침몰한 것이다.

⁶⁰- 『朝日新聞』, 2007년 8월 29일.

⁶¹- 7·29 참의원 선거 직후, 오자와 이치로 대표는 야당인 민주당을 소홀히 온 미국의 대일외교 등을 이유로 토마스 쉬퍼 주일대사의 면담을 거절하였다.

I
II
III
IV
V
VI

V

아베정권의 대외전략노선과
대북전략



1. 아베정권의 대외정책 노선

가. 대외정책 노선과 『자유와 번영의 호(自由と繁榮の弧)』 구상

아베정권은 대외정책 과제는 고이즈미 정권의 후유증의 하나인 동아시아외교의 복원을 꾀하면서, 글로벌 차원까지 확대된 미·일동맹의 발전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위상 및 영향력의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다. 즉, 아베정권의 대외정책의 핵심과제는 ① 한국, 중국 등과의 관계 개선과 동아시아 외교 부재의 극복 ② 가치관과 이익을 공유하는 미·일동맹의 강화·확대 ③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위상 및 영향력의 확대 등이다.

그러므로 아베 총리는 취임직후, 2006년 9월 29일의 첫 국회 소신 표명연설에서 ‘새로운 사고에 입각한 주장하는 외교’로의 전환을 역설하면서, ‘세계 및 아시아를 위한 미·일동맹’, ‘아시아와의 강고한 연대’ 등을 주장하였다.⁶²

아베정권의 대외정책 구상은 2006년 11월의 아소 외무장관의 『자유와 번영의 호(自由と繁榮の弧)』에서 상징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아소 외무장관은 2006년 11월 30일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의 정책연설에서 기존의 미·일동맹의 강화, 한국·중국·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UN 등과의 국제협조, 등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외교’를 주창하면서, 『자유와 번영의 호(自由と繁榮の弧)』의 형성을 새로운 외교 기축으로 제시하였다.⁶³

62. 『第165回国會における安部内閣總理大臣所信表明演説』(2006.9.29).

63. 麻生太郎, 『自由と繁榮の弧をつくる擴がる日本外交の地平』(2006.11.30).

<그림 V-1>와 같은 「자유와 번영의 호(弧)」는 ‘보편적 가치’를 기초로 하는 윤택하고 안정된 지구촌 사회를 형성한다는 기본구상아래 유라시아 대륙의 주변지역을 따라 북구유럽, 발트 3국, 중·동유럽, 중동, 인도대륙, 동남아, 동북아 등을 연결하여 구축되는 것인데, 일본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하여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인도, 호주, G8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유라시아 대륙의 주변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신흥 민주주의 발전국가’들을 지원하며 「자유와 번영의 호(弧)」를 형성·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림 V-1> 자유와 번영의 호(弧)



「자유와 번영의 호(弧)」 구상의 전략적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자유와 번영의 호(弧)」 구상은 지미파 그룹에 의해 주도되었고, 따라서 글로벌차원으로 확대 되어가는 미·일동맹을 보완하려

는 전략적 의도가 투영되었다. 즉, 하시모토 정권의 『유라시아 외교』가 당시 보리스 엘친 러시아 대통령과의 개인적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북방 영토의 반환 등을 목적으로 한 대러시아 외교로서 외무성내 ‘러시아 스쿨’의 핵심인물들에 의해 주도된 대외전략구상이었는데 비해, 아베정권의 『자유와 번영의 호(弧)』 구상은 소위 ‘아메리카 스쿨’의 핵심인물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미·일동맹의 보완과 더불어 미·일·유럽 삼각협력⁶⁴ 관계를 추구하는 대외전략구상이다.

둘째, 일본 외무성의 ‘아메리카 스쿨’의 핵심인물들이 주도한 대외 전략 비전 『자유와 번영의 호』와 2007년 2월에 발표된 미국의 『미·일 동맹: 2020까지의 아시아 전략, The U.S.-JAPAN ALLIANCE: Getting Asia Right through 2020』(이하 『제2차 아미티지 보고서』라고 칭함)⁶⁵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공유하는 가치관’⁶⁶이다. 예컨대, 『자유와 번영의 호』 구상에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외교’를 주창하고 있고, 『제2차 아미티지 보고서』에서도 아시아 전략구상과 관련하여 민주적 가치, 자유경제, 법의 지배, 정치적 자유 등 ‘미국과 공유하는 가치들’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는 ‘미·일의 가치외교의 전개와 전략적 협력’ 등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미·일·유럽 삼각협력 관계의 강화 구상에는 향후 ‘일본의 NATO 가맹’⁶⁷이 내포되어 있다. 최근 NATO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64. 鈴木美勝, “新外交戦略, 自由と繁榮の弧,” 『世界週報』(2006.12.26), pp. 16~19.

65.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The U.S.-JAPAN ALLIANCE: Getting Asia Right through 2020* (Washington: February 2007).

66. 鈴木美勝, “日米價值外交とアーミテージ報告Ⅱ,” 『世界週報』(2007年 3月 27日), pp. 10~13.

I
II
III
IV
V
VI

역외 국가들 즉, 한국, 일본, 호주 등의 국가들과 협력의 강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와 같은 NATO의 전략에 응해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NATO 가맹을 추구하는 것이다.

넷째, 『자유와 번영의 호(弧)』 구상에서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의 공유’를 강조한 것은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유와 번영의 호』 구상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외교’를 주창하면서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의 공유를 기반으로 미국·유럽 등과의 삼각 연대 강화를 강조한 것은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의 내포를 시사한 것이다. 일본의 호주, 인도에 대한 전략적 중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2007년 3월 21일 관저에서 가진 디체니(Cheney)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일·호·인 4개국 포럼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자유와 번영의 호(弧)』 구상에는 일본의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전략적 중시와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의 참가 의도⁶⁸가 투영되어 있다. 즉, 『자유와 번영의 호(弧)』에는 ‘유라시아 대륙의 주변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신흥 민주주의 발전국가’들을 지원하며, 이들 국가들에게 일본·미국·유럽 등의 공유하는 가치관을 침투(浸透)시킨다는 전략적 구상이 담겨 있는데, 이와 같은 일본의 구상은 에너지 확보를 지향하여 유라시아 대륙의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에 참가하려는 의도에 전략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⁶⁷- 鈴木美勝, “新外交戦略, 自由と繁榮の弧”(2006. 12).

⁶⁸- 위의 글.

나. 동아시아 외교의 전개

아베 총리는 경선과정에서 한국·중국 등과의 갈등의 불씨 중 하나였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표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참배를 자제하는 의사를 나타내었는데, 취임 직후 미국보다도 먼저 중국과 한국을 방문하였다. 즉, 아베 총리는 동아시아 외교 부재의 극복 차원에서 10월초 중국과 한국 등을 방문하였다. 아베 총리는 2006년 10월 8일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국가주석, 우방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 등과 회담을 가진 뒤, 「중·일 공동프레스」를 발표하였다.

「중·일 공동프레스」에서는 중·일 양국이 정치와 경제의 양 바퀴(兩輪)를 강력하게 작동시켜 중·일관계를 한 차원 높이고, 공통의 전략적 이익에 입각한 ‘전략적 호혜관계’의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으며, 정치·경제·안전보장·사회·문화 등 분야의 각 수준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촉진, 국제문제 및 지역문제의 협조와 협력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⁶⁹

이와 같은 아베 총리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2006년 11월에 2003년 9월 중단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의 재개가 합의되고, 2006년 12월 ‘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아울러, 원자바오 총리의 일본 방문도 이루어졌다.

원자바오 총리는 2007년 4월 11~13일 중·일관계의 개선 분위기 속에 방문하였는데, 이는 중국총리로서 2000년 주룽지(朱鎔基) 총리의 방일 이후, 7년만의 방문이다.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는 2007년 4월 12일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⁶⁹- 日本 外務省, 『2007 外交青書』, p. 26.

갖고 ‘전략적 호혜관계’의 구체적 내용과 협력증진 방안, 국제 및 지역현안의 공조 등에 관해 논의한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채택하였다. ‘공동 언론 발표문’에 담긴 ‘전략적 호혜관계’의 주요 내용은 <표 V-1>와 같다.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의 방일 이후, 중·일간에는 관계개선을 향한 인적교류가 점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특히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일관계가 ‘실리적 관계’ 개선을 지향하여 우호적 분위기로 전환된 것은 아베정권의 동아시아 외교의 성과이기도 하다.

<표 V-1>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의 주요 내용

- 정부·의회 등 고위인사 교류 확대 → 정치적 신뢰 증진
- 에너지·환경·금융·정보통신 기술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 분야에서의 상호협력 강화 → 상호이익과 공동발전 실현
- 국방·안보 분야 대화 및 교류 강화 → 역내안정 유지 도모
- 청소년 등 인적교류 활성화 → 상호 우호적인 정서 증진
- 국제문제 및 지역문제의 협조와 협력의 강화 → 상호 국제위상 제고를 위한 협력기반 마련

그리고 아베 총리는 중국 방문에 이어 한국을 방문했다. 아베 총리는 2006년 10월 9일 베이징에서 바로 서울을 방문하여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일정상회담에서는 과거사에 기인한 제문제, 해양을 둘러싼 제문제, 북한의 핵실험 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등에 관해 논의되었고, 한·일 양국이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의 우호관계의 구축에 노력하는 것이 합의되었다. 즉, 아베총리의 방한과 함께 중단되었던 한·일정상

회담의 재개를 통하여 양국 관계는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므로 하노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중에 개최된 정상회담은 고이즈미 총리와의 과거 정상회담과는 달리 부드러운 분위기속에 30여분간 이루어졌는데, 한·일 양국 정상은 ‘할말은 분명히 하면서도 부드럽게’ 함으로써, 관계 개선을 향한 노력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한·일관계는 아베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냉각기를 벗어나 한계속에서 관계 개선을 향해 나아갔다. 아베정권은 반기문 외무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당선을 지원하였고, 한·일간에는 양국의 외무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교류는 물론 인적교류가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아베 총리의 중국, 한국 등의 방문은 고이즈미 정권의 동아시아 외교 후유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베 총리는 아세안 외교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아베 총리는 2006년 11월에 베트남을 제14회 APEC 정상회담 참석차 방문하여 일본·베트남 정상회담을 가졌고, 동년 12월에는 필리핀을 공식방문을 함과 더불어 정상회담을 가졌다. 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06년 11월에 일본을 국빈방문을 하여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아베정권은 외교의 새로운 기축인 「자유와 번영의 호(自由と繁榮の弧)」를 아시아에서의 추진을 위하여 호주, 인도 등을 전략적으로 중시하였다.

일본·호주간에는 양국 외무장관의 상호 방문을 비롯하여 각료급 전략대화가 전개되었고,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인도 역시 인도총리가 일본을 공식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는 등 일본·인도간의 고위인사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I
II
III
IV
V
VI

다. 미·일동맹의 강화·확대와 일본·호주의 안보협력 강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호주의 존 하워드 총리는 2007년 3월 13일 도쿄에서 「안전보장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일·호 안보공동선언」이라고 칭함)을 서명·발표하였다. 그리고 이어 4월 12일 도쿄에서는 미·일·호 3국의 외교·국방 분야의 국장급 회의가 개최되었다. 미·일동맹은 호주는 물론 인도까지 포함한 안보교류 및 협력을 한층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러므로 「일·호 안보공동선언」의 발표와 더불어 미·일·호 3국의 안보협력 회동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견제를 포석으로서 미·일·호 3각 안보동맹체제의 구축이 추구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고, 중국 역시 환구시보(環球時報) 등을 통하여 중국에 대한 ‘아시아 판 나토(NATO)’라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였다.⁷⁰ 주일미군의 재편을 통한 미·일동맹의 강화 동향과 전략적 의미, 「제2차 아미티지 보고서」의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초석으로서의 미·일동맹 강조 및 미·일동맹과 인도의 연대 비전, 미국의 중국견제 및 포위망 전략(a hedging strategy), 아베정권의 ‘전후체제 탈피, 강한 일본 건설’ 노선 등을 고려해 볼 때, 「일·호 안보공동선언」의 전략적 함의는 매우 주목된다.⁷¹

(1)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의 배경과 미국·일본·호주의 전략적 입장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에는 일본·호주 양자간의 전략적 입장

⁷⁰ 배정호, “미·일·호 3각 안보연대와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의 전략적 함의,” 『국제이슈해설』, 제105호 (서울: 자유기업원, 2007. 4. 20).

⁷¹ 배정호, “미·일·호 3각 안보연대와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의 전략적 함의.”

뿐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입장이 투영되어 있다.

미국은 2001년 호주와의 「2+2(외교·국방장관)」 회담시에 미·한·일·호 등 역내 동맹국을 연계하는 다자안보협력 방안을 제시하였고, 9·11 테러사건 이후 2002년 3월에 하와이에서 개최된 미국·일본·호주 3자간 세미나를 통해서도 일본·호주의 공감대를 확보하였다.

이후, 미국·일본·호주 안보대화는 3국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활성화를 띠며 전개되었다. 미국·일본·호주 3자 외무차관급 정책협의회가 2002년 8월에 도쿄에서 개최되어 대중국정책, 대북한정책, 아시아 안보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였고, 나아가 워싱턴, 도쿄, 캔버라 등에서 후속 모임이 이루어지면서 전략대화의 의제도 북한핵·이라크·이란·중국의 역할·중앙아시아·대테러·지역협력·ARF 기능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차관급 정책협의회는 2005년 5월에 접어들어 미국의 주도로 장관급 전략대화로 격상·운영되었다. 2006년 3월에 개최된 미국·일본·호주 3개국 장관급 전략대화에서는 중국의 군비 투명성 문제, 이란·북한 핵의 대응 공조, 대테러 정례회의 개최, 일본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지지 등을 요지로 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7년 2월에는 미국의 덱 체니 부통령이 일본과 호주를 방문하여 미국·일본·호주 3각 안보협력이 ‘역내 평화와 자유의 보루’임을 강조하면서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 채택을 촉구·지원하였다.

이처럼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에는 일본·호주·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투영되어 있는데, 각자의 전략적 입장은 <표 V-2>과 같다.

I
II
III
IV
V
VI

<표 V-2> 미국·일본·호주의 전략적 입장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부상, 북한 핵문제, 양안(兩岸)문제, 테러, 해적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역내 양자동맹을 보완 할 수 있는 다자간 안보협력을 전략적으로 검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양자동맹국들을 전략적으로 연계 ○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으로 군사적으로 확대하는데 역사적·지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본·호주의 전략적 협력을 중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과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과 '미사일방어체제(MD)'에 모두 참여하고 있음. ○ '유사시' 중국·러시아 등 대륙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미국·일본·호주 등 해양세력의 전략적 연계망을 구축함.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후체제 탈피, 강한 일본 건설'을 추구하는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안보협력 확대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이외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군사협력 체제 수립 기회 ○ '21세기 국제지도국'을 지향하여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추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안보 역할의 확대는 미래지향형 리더십의 확보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내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위대 해외활동을 '부수적 임무'에서 '주임무'로 격상 ○ 미국·일본·호주의 3각 안보협력체제의 구축은 미·일동맹의 질적 강화 및 일본의 전략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매우 유리함. ○ 테러, WMD 확산, 해적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 일본의 해상 수송로의 안전확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함.
호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외교적 위상 제고와 아시아태평양 강국으로서 정체성 확보를 추구하기 위해 미·일과의 안보협력 강화 필요함. ○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미·일동맹과의 안보협력으로 귀결되며, 대테러전·PSI·MD 등 대미국 협력 강화로 귀결되므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전략적 위상 제고에 중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각 안보협력체제의 한축으로 부상 ○ 대일관계 긴밀화를 통해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의 강화는 물론 포괄적 안보 협력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확보하는데 중요함.

출처: 배정호, "미·일·호 3각 안보연대와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의 전략적 함의," 『국제이슈해설』, 제105호 (서울: 자유기업원, 2007. 4. 20).

(2)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의 주요 내용

일본과 호주는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의 공유를 강조하면서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을 서명·발표하였다.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은 <표 V-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민주주의·인권·자유·법의 지배 등의 가치와 안전보장상의 이익 등을 기초로 하면서 자위대와 호주군의 실질적 협력의 강화를 추구해 갈 것임을 천명하였고, 아울러 일본·호주의 안보협력이 미국·일본·호주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유익하다고 역설하였다.

나아가,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은 향후 협력분야로 마약거래와 위조지폐, 무기밀매 등의 초국가적 범죄 문제, 국경안보, 테러 대책, 대량파괴무기와 운반수단의 비확산, 재해구조 등 인도적 지원 활동 등 9개 항목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이행방법으로 양국의 외무·국방 장관이 참석하는 안전보장협의회(2+2), 자위대와 호주군의 공동훈련 등을 명기하였다.

I

II

III

IV

V

VI

<표 V-3>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의 주요 요지

-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민주주의·인권·자유·법의 지배 등의 가치와 안전보장상의 이익 등을 기초로 함.
- 공동 관심분야 관련 안전보장의 진전을 위해 자위대와 호주군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함.
- 일본·호주의 안보협력은 미국·일본·호주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유익함.
 - 대미 양자동맹의 전략적·안보적 중요성을 확인하며, 양국관계 증진을 통해 미국·일본·호주 3각 외교·안보협력을 강화
- 북한 핵, 탄도미사일, 납치문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내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협력함.

<양국간 세부 협력 분야>

- 마약거래와 위조지폐, 무기밀매 등의 초국가적 범죄 문제
- 국경안보 ○테러 대책 ○대량파괴무기와 운반수단의 비확산
- 평화활동 ○전략적 평가와 관련된 정보의 교환
- 해상과 항공의 안전 ○재해구조 등 인도적 지원 활동
- 전염병 대유행 등 긴급사태 대응 계획

<이행 방안>

- 협력 추진을 위한 행동계획 책정
- 외무장관간 전략대화와 방위담당 각료의 대화 강화
- 정기적인 각료간 대화(2+2) 창설을 포함하여 외무·방위 등 합동대화 강화

출처: 『朝日新聞』, 2007년 3월 14일 참조.

(3)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의 전략적 함의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에서 일본·호주의 안보협력이 미국·일본·호주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유익하다고 언급하였듯이, 최근 미국의 세계전략 구상, 미·일동맹의 글로벌화와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 확대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본·호주의 안보협력은 양자간 차원 이

상의 전략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의 전략적 함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⁷²

첫째,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을 매개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3각 안보협력체제가 구축될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안보협력의 수준도 안보대화의 수준에서 자위대와 호주군의 공동훈련에 따른 미·일·호 3국 군사협력의 수준으로 질적 강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둘째, 아시아·태평양지역은 한·미동맹, 미·일동맹, 미·호동맹 등 미국과의 양자동맹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미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맥락에서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의 전략적 의의를 의미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미·일동맹과 미·호동맹을 연계할 수 있는 일본·호주 안보협력의 질적 강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의 기반이 구축되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동맹의 구축도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셋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과 다자동맹의 구축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에 뒤이어 미·일 양국과 인도와의 전략적 관계 강화에 주목된다. 『제2차 아미티지 보고서』, 『자유와 번영의 호(自由と繁榮の弧)』 등에서도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 및 미·일동맹과 인도와의 연대 등에 관해 언급되어 있는데, 일본은 2006년 12월 일본-인도 도쿄 정상회담을 통하여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의 구축을 지향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양국 군 관계자의 교류 강화 및 합정의 상호 방문 등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⁷² 배정호, “미·일·호 3각 안보연대와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의 전략적 함의.”

I
II
III
IV
V
VI

2007년 2월에는 미국·일본·인도 3국의 군사전문가들이 두 차례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안보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4월 16일에는 미국·일본·인도 3국의 합동 해상훈련이 일본 동쪽 태평양 연안에서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미국·일본·인도 3국의 안보협력은 중국 견제로 분석되고 있다. 인도가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중·러와도 합동 군사훈련을 한 점에 주목하여 인도의 ‘중국 견제 가세’에 신중한 견해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시아·태평양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미·일·호 3국 안보협력체제에 인도가 전략적으로 실질적인 참여를 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 즉, 중국이 21세기의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질서를 주도하기에 한계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국제정치 속성상 미·일동맹 또는 일본과 인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강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면서 ‘유사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미·일·호·인 의 전략적 연대 고리가 구성될 수 있으며, 4개국 전략대화의 창설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넷째, ‘세계속의 미·일동맹’을 지향한 전략적 공통목표의 설정과 더불어 미·일동맹의 변혁의 일환으로 미·일 연합군 유사체제를 지향한 주일미군 재편작업이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일미군의 재편과 일본의 군사적 역량 강화 작업은 미국의 중국 견제를 지향한 포위망 구축 전략과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일본과 호주의 전략적 협력의 강화는 미·일동맹과 연계되어 유사시 중국 견제를 위한 포위망 구축 전략으로 귀결될 수 있다. 즉,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의 전략적 의미와 관련하여 미·일동맹과 연계된 대중국 견제능력의 증강을 위한 포석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2. 아베정권의 대북전략과 북·일관계

가. 아베정권의 대북전략 노선

아베 총리는 일본판 강한 북풍을 타고 정치지도자로 등장하였다. 아베 총리는 납치문제의 해결을 중시하고, 대북정책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듯한 조치를 인사를 통하여 나타내었다.

아베 총리는 정권의 출범과 함께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에서 최측근인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으로 하여금 납치문제 담당 특명장관을 겸직하도록 하였고, 재무성 출신의 나카야마 교오꼬 내각참여를 납치담당보좌관으로 임명한 뒤,⁷³ 2006년 9월 29일 각료회의에서 ‘납치문제 대책본부’를 설치하였다.⁷⁴ ‘납치문제 대책본부’는 납치문제에 대한 내각차원에서의 종합적 대책을 위하여 설치되었는데, 각료 전원이 참가하며 아베 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았다(<그림 V-2> 참조).

아베정권의 대북정책은 납치문제에 최역점을 두고 전개되었으며, 아베 총리의 지휘아래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 겸 납치담당 특명장관, 나카야마 교오꼬 납치담당 총리보좌관, 내각부의 납치문제 담당 종합팀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한·일 양국의 언론에서는 아베정권의 대북 정책 그룹의 등장에 대해 대북 강경론자의 전면 배치라고 특징지어 언급한 바 있는데,⁷⁵ 아베 총리와 함께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 나카야마 교오꼬 납치문제 담당 총리보좌관 등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에 매우 강경한

73. 『共同通信』, 2006年 9月 27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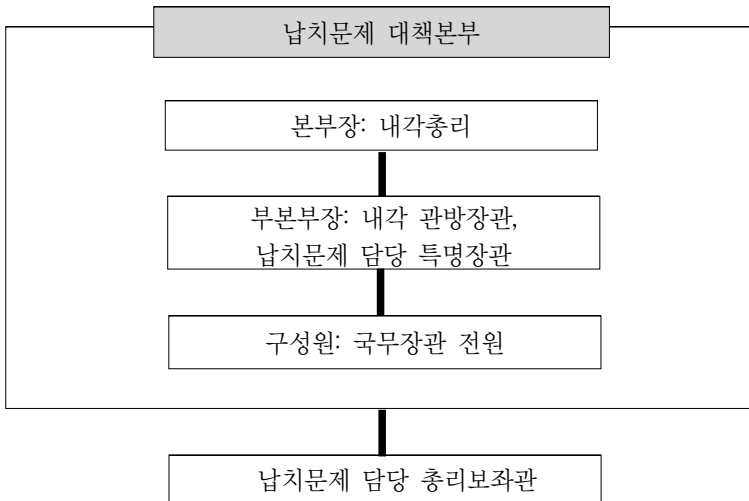
74. 『朝日新聞』, 2006年 9月 30日.

75. 『조선일보』 2006년 9월 27일; 『중앙일보』 2006년 9월 27일.

입장을 취했다. 아베 신조는 총재로 선출되기 하루 전인 9월 19일, 내각 관방장관으로서 일본 정부가 일본 내 북한 계좌를 사실상 봉쇄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요컨대, 아베정권의 대북정책은 미국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과의 공조체제를 중심으로 경제제재 등 압박에 비중을 둔 ‘대화와 압박’전략을 구사하였는데, 납치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매우 경직되게 운용되었다.

<그림 V-2> 납치문제 대책 본부 조직도



나. 북한의 핵 실험과 아베정권의 대북제재 조치

(1) 북한 핵 실험에 대한 반응

북한의 외무성이 2006년 10월 3일 핵실험을 공식발표하자, 아베 총리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아래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나아가 “미국과의 정보교환”을 하도록 긴급훈령을 내렸다.⁷⁶

그리고 일본 정부는 10월 6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의 핵 실험 포기’ 촉구 의장 성명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아베 총리는 2006년 10·8 중·일 정상회담 및 10·9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실험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에 관해 논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10·8 아베-후진타오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도록 중국측에 북한을 압박하는 강력한 예방외교를 요청했다.⁷⁷

10월 9일 서울에 도착 직후, ‘북한의 핵 실험 감행’ 소식을 접한 아베 총리는 단호한 행동을 취하기 위한 즉각 협의를 시작하도록 내각에 지시를 내렸다. 이어 아베 총리는 청와대에서 개최된 10·9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실험의 위협성과 그에 대한 용인할 수 없는 점, 국제사회의 가일층 엄격한 조치, 한·일양국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속한 조치의 채택을 위한 긴밀한 협력, 등의 인식을 노무현 대통령과 공유하였다. 아울러, 정상회담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2002년 평양선언과 작년 6자회담 공동성명, 지난 7월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 국제사회의 노력을 크게 배반한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단호한 대처를 역설하였다.⁷⁸

76. 『중앙일보』, 2006년 10월 4일; 『동아일보』, 2006년 10월 4일.

77. 『朝日新聞』 2006年 10月 9日; 『중앙일보』, 2006년 10월 9일; 『조선일보』, 2006년 10월 9일.

78. 『중앙일보』, 2006년 10월 10일; 『조선일보』, 2006년 10월 10일; 『동아일보』, 2006년 10월 10일.

그러므로 아베 총리는 귀국 직후 10월 11일 중의원 답변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북한의 6자회담으로의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대북 제재의 강도 높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다. 이에, 일본 내각은 동일 측각 관계 각료회의와 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의 미사일과 함께 핵개발로 인해 안전보장상의 위협이 배증했다는 인식아래 북한 선박의 입항·수입 전면 금지 등의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되는 특단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⁷⁹ 일본은 금융제재에 이어 독자적인 대북 추구제재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나아가, 일본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의 핵 실험 포기 촉구 의장 성명’(10.6)의 적극 지지에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10.15)하자,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을 표명하였다.

요컨대, 일본은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대해 강경 대북 제재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아울러 유엔 제재 결의에 실효를 부여하여 ‘북한의 조건없이 6자회담으로의 복귀’⁸⁰를 압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2006년 11월 1일 미·중·북 6자회담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합의된 것에 대해 환영을 표명하면서도, 단독제재 및 유엔 제재 결의에 따른 제재의 이행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⁷⁹ 『讀賣新聞』, 2006年 10月 12日.

⁸⁰ 『연합뉴스』, 2006년 10월 31일.

(2) 대북 제재 조치

(가) 독자적 조치

일본 정부는 10월 11일 밤, 총리관저에서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 단행에 대한 북한 제재 조치의 발동을 결정했다.

아베 총리는 대북 제재 조치의 결정의 이유에 대해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입장에서 북한의 핵실험 단행을 결코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⁸¹ 그리고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안전보장에 극히 중대한 사태이고,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입장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고 명언했다.

일본의 대북 제재 조치는 <표 V-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즉,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모든 북한산 상품의 수입 전면 금지, 북한정부 관계자에 한정되었던 입국 금지 조치의 민간인에게도 확대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와 같은 대북 제재조치는 13일에 각료회의 결정을 거쳐 14일부터 시행되었다. 대북 제재조치의 시행과 더불어 일본은 일본항구에 정박 중이던 모든 북한 선박을 출항시켰고, 아울러 모든 북한산 상품의 수입 전면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북한 상품이 제3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였다. 즉, 일본은 수입업자의 철저한 보고, DNA 감정을 통한 원산지 판별 실시 등을 시행하였다.

일본의 대북 제재조치가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대일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과 한국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북한이 결정적

⁸¹ 『讀賣新聞』, 2006年 10月 12日; 『産經新聞』, 2006年 10月 12日.

I
II
III
IV
V
VI

인 타격은 받지 않지만 손실은 적지 않다. 예컨대, 일본 재무성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1월~7월까지의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약 61억 3900만 엔이지만, 일본이 조총련계 교포들의 대북 송금의 제한 등을 비롯하여 북한으로의 비공식적 자금 유입까지 제재를 가할 경우 결코 타격은 무시될 수 없는 수준이다.

<표 V-4> 일본의 독자적 대북 제재조치의 주요 내용

대북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전면 금지 ○북한 국적자의 원칙적 입국 금지
국제사회와의 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일간의 긴밀한 연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엄격한 대응 조치를 촉구 ○6자 관련국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연대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북한 수입금지 등에 관한 긴급대책회의의 설치

일본 정부가 신속하게 이와 같은 대북 제재 추가조치를 독자적으로 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미국은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 직후, 유엔헌장 7장을 기반으로 하는 대북 제재안을 제출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기 시작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는 중·러와의 조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일본은 중·러의 대북 제재로의 동참을 촉구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속히 강력한 조치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신속히 대북 제재 추가 조치를 결행한 것이다. 즉,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헌장 7장을 근거로 하는 강력한 압박조치의 결의를 취하기 위해 조속



히 합의를 모으는데 일조하기 위해, 먼저 강경한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다.

둘째,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이어 핵실험이 일본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에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전략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아베 정부는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전략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셋째,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 국적자의 원칙적 입국 금지 등을 통해 북한과 일본과의 밀수 라인을 완전히 차단하여 음지에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수입원을 완전히 봉쇄하기 위함이다.

(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동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대해 “최대의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10월 15일 북한의 핵실험을 제재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유엔헌장 7장에 근거한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발표하였다. 즉, 북한 제재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이 채택·발표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1718’은 중·러의 반대로 군사조치(7장 42조)는 배제한 대신, 7장 41조에 근거하여 비군사적 제재에 역점을 두었다. 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는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의 이전 저지를 위해 선박 등의 화물 검사, 금융제재 등을 포함하였다.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표명하였고, 특히, 북한 화물 검색을 위한 선박 검사에 적극 협력할 것을 표명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북한 권력층에 실질적인 타

I
II
III
IV
V
VI

격을 주기 위한 사치품 수출금지를 실행하기 위해 일본산 담배·술 등 기호품과 가전제품을 수출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⁸² 이와 같은 일본의 제재조치는 북한 권력층에 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 화물 검색을 위한 선박 검사 활동을 전개하는데 헌법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자민당에서는 주변사태법 선박검사법에 따른 활동, 임검(臨檢) 등의 활동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의 제정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는 임검은 상황의 전개에 따라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교전권의 행사’에 연계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었고, 결국 검토 수준에서 끝났다.

현행 미·일지위협정을 근거로 할 경우, 일본은 북한 화물 검색을 위한 선박 검사 활동은 미군의 지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일본의 선박 검사 활동은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항만기지 및 비행장 제공, 미군 함선의 급유, 미군 시설의 경비 등의 미군의 선박 검사 활동에 대한 후방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도 미군에 한해 할 수 있는 것이고, 영국·호주 등의 북한 화물 검색을 위한 선박 검사 활동은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일본은 북한 핵실험을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변지역의 사태로 인정하여 주변사태법 선박검사법을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런데 선박검사법에 근거한 활동은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고 상대 선박의 승낙이 필요하다. 즉, 상대 선박에 대한 요청·설득이 활동의 중심이고, 강제력의 결여 및 무기사용 권한

⁸² 『讀賣新聞』, 2006年 10月 16日.

의 제약 등으로 인해, 예측불허의 돌발 사태의 대처에는 실효성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민당 일각에서는 일본의 임검 실시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교전권의 행사’와 연계될 가능성 때문에 특별조치법의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본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석개헌 등을 통하여 북한 화물 검색을 위한 선박 검사 활동에 미·일 전략적 분담을 통하여 적극 참가하였다.

미국이 동해와 서해 공해상을 맡고, 일본은 쓰시마(對馬) 해협과 오키나와(沖繩) 북서부 해역에서 북한 선박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본의 전략적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주로 동해와 서해를 통해 북한 항구로 들어가는 북한 화물선이나, 동지나해로 나가려는 북한 화물선에 대한 경계·감시활동을 전개한다.⁸³ 즉, 동해와 동지나해를 연결하는 쓰시마 해협의 경우, 나가사키(長崎) 현의 이키(壹崎)섬과 쓰시마 사이의 동(東)수도와 쓰시마와 한반도 사이의 서(西)수도로 나누져 있는데,⁸⁴ 일본은 이 가운데 동수도 해역을 집중 경계, 감시하는 것이다.

둘째, 일본은 오키나와 북서부 해역에서도 동남아 해역에서 동해 외에 서해 쪽을 통해 북한의 항구로 향하는 선박을 감시하기 위해 경계활동을 전개한다.

셋째, 이와 같은 활동을 위해,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P3C 초계기, 항공자위대의 공중경계경보기(AWACS), E2C 조기 경계기 등을 동

⁸³- 『讀賣新聞』, 2006年 10月 22日.

⁸⁴- 일본 해상자위대에 의하면, 2006년 시점 이 해역의 선박 교통량은 동수도가 50~70%, 서수도가 30~50%이다.

I
II
III
IV
V
VI

원하여 북한 전투기의 접근을 경계·감시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해상 자위대의 호위함 등을 쓰시마 해협과 오키나와 해역에 배치하여 수상한 선박이 발견될 경우에 추적함과 더불어 북한의 동서 양해역에서 감시중인 미군측에 통보하여 적절한 대응을 한다.

다. 2·13 합의 이후의 아베정권의 대북전략과 북·일관계

2·13 합의가 도출되었지만, 일본은 납치문제 최우선·에너지 지원 불참 등의 입장을 취하였다. 따라서 합의에 따라 개최된 하노이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담(working group)은 경직되어 운용되었고, 북·일관계는 상호입장 차이, 조총련 중앙본부의 토지·건물 경매 문제 등으로 거의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조총련 중앙본부의 토지·건물 경매 문제와 관련 일본 검찰의 정치적 배려 수사, 올란바토르 북·일 국교정상화회담에서 과거청산과 납치문제의 병행 협의 등이 이루어지면서 한계속의 진전의 조짐을 나타내었다.

(1) 제5차 3단계 6자회담 및 2·13합의와 북·일관계

일본은 제5차 3단계 6자회담의 재개를 앞두고, 북핵보다 납치문제의 해결이 우선이라는 인식아래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다소 진전이 있다하더라도 납치문제에 진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대북 식량 및 에너지 지원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⁸⁵

따라서 제5차 3단계 6자회담이 개막된 2월 8일, 아베 총리는 2007년 2월 8일에 북핵 6자회담에서 설치가 검토되는 북·일 실무그룹에 대

⁸⁵ 『共同通信』, 2007年 2月 3日.

해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 협의가 에너지 지원 등의 전제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고, 이와 같은 일본의 입장은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을 통해서도 표명되었다.

그러므로 일본은 제5차 3단계 6차회담에서 북핵문제 못지않게 자국의 납치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데 주력하였고, 2·13 합의가 도출되었지만, 일본은 기존의 입장 표명대로 6차회담과 2·13 합의의 의의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면서도 대북 에너지 지원에 동참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였다. 즉, 일본은 대북 에너지 지원과 관련하여 ① 당분간 북한의 에너지 현황 조사 등 간접 협력을 하고, ② 중유 제공 등 자금 부담은 핵이나 납치문제의 진전 상황을 보가며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납치문제 최우선·에너지 지원 불참 등은 2·13 합의에 따라 설치된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담(working group)도 경직되도록 하였다.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담이 3월 7~8일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는데, <표 V-5>과 같이 납치문제, 과거청산과 보상문제 등을 둘러싼 각자의 입장만 주장하다가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특히, 납치문제와 관련, 일본은 납치문제의 해결 없이 국교정상화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였고, 북한은 이미 납치문제는 해결되어 끝났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I
II
III
IV
V
VI

<표 V-5>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담의 입장차

의제	일본(하라구치 고이치 대사)	북한(송일호 대사)
납치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치문제의 해결없이 국교정상화가 없음을 강조 ○생존자의 귀국, 진상 규명, 납치 실행법의 인도, 실종자 조사 등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 해결된 문제 ○재조사는 경제제재의 철회, 과거 청산의 개시과정 등을 밝가며 고려할 것
국교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양선언에서 명기한 것처럼,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고, 경제방식에 의한 일괄적 해결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제연행 및 중군위안부에 대한 보상은 경제협력과 별개임을 강조 ○별도의 과거 청산을 요구
차기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정하지 못함. ○베이징 채널을 통해 조정 	

(2) 조총련 중앙본부 경매 문제 등과 북·일관계

일본인 납치문제와 그에 따른 북·일관계의 악화의 영향으로 인해 조총련은 세력이 크게 약화되어 왔다.

최근 일본 재정부의 산하 부실채권정리회수기구(RCC)가 조총련의 부실채권이 대한 회수와 함께 조총련 중앙본부의 토지·건물이 도쿄 지방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북·일관계는 또 다른 갈등을 빚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실채권정리회수기구(RCC)는 조선신보사·도쿄도 본부 등에 대한 압류·경매를 통해 약 22억 엔 이상을 환수하였는데, 조총련 중앙본부에 대해서도 2005년 11월에 조은(朝銀) 신용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약 628억 엔의 채무변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압박을 가해왔다.

이에 조총련측은 대응책으로서 법원 판결(07.6.18) 이전에 ‘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고육책을 선택하고, 비밀리에 매각을 추진

하였다.

그 결과, 조총련측은 2007년 5월 31일 오가타 시게타케 전 공안조사청 장관이 대표인 투자회사 하베스트사와 35억 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6월 8일에 등기까지 완료하였다.

그러나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토지의 매각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알려지고,⁸⁶ 비난여론과 야기되면서 도쿄 지검 특수부가 수사를 착수하였다.

이로써 조총련측의 중앙본부 건물·토지 비밀 매각은 무산되었고, 검찰은 6월 28일 오카타 전 공안청 장관을 체포한 뒤, 7월 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일본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조총련은 위장 매각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아니라, 오카타 전 장관 등의 사기 매입 사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발표하였다. 즉, 일본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조총련을 위장매각의 피의자가 아닌 사기사건의 피해자로 발표하였다.⁸⁷

이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는 악화일로에 있는 북·일관계를 정치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일본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허위등기 혐의를 적용할 경우, 매각을 주도한 조총련측 인사들에 대한 수사 및 사법처리가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북한과 갈등이 한층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⁸⁸

그러나 ‘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고육책이 무산되었으므

⁸⁶- 『毎日新聞』, 2007年 6月 12日.

⁸⁷- 『서울신문』, 2007년 7월 3일.

⁸⁸- 『연합뉴스』, 2007년 6월 29일.

I
II
III
IV
V
VI

로, 조총련과 북한은 강력한 반발을 나타내었다.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하여 7월 1일 ‘조총련의 탄압은 주권 침해 행위이며, 일본은 6자회담 참가 자격이 없다’고 비판한 뒤, 박길연 주 UN 대사를 통하여 7월 6일 반기문 UN 사무총장에게 조총련 탄압 문제를 UN총회에서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일본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평양 군중집회를 7월 10일 개최하기도 하였다.

조총련의 부실채권 문제와 중앙본부의 토지·건물 매각 문제 등은 조총련 내부에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⁸⁹ 본국파와 자립파 간의 갈등·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본국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충성과 북한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는 그룹이고, 자립파는 북한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조총련의 자체적인 자립을 추구하는 그룹이다.

이처럼, 일본 재정부의 산하 부실채권정리회수기구에 의한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토지의 경매 문제가 조총련의 내부 갈등·대립 등 조직 기반 침하로 연결되면서, 북한은 위기의식을 나타내며 전방위로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등 공세를 가하였다.⁹⁰

북한은 7월 1일 외무성의 성명을 통하여 ‘조총련에 대한 일본 당국의 탄압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불순한 속셈’을 가진 일본의 6자회담 참가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어 7월 6일에는 노동신문, 평양방송, 민주조선 등 북한의 언론매체와 조총련의 기관지 조선신보를 동원하여 일본 정부를 맹렬하게 비난하였다. 게다가,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ARF)에 참석차 마닐라를 방문한 박의춘 외무상의 수행원 정성일 아시아국 부국장은 7월 30일 ‘조총련의 문제는 제2의 BDA 금융제재’

⁸⁹- 『연합뉴스』, 2007년 6월 27일.

⁹⁰- 『연합뉴스』, 2007년 7월 11일.

라고 비난하였다.⁹¹ 그러므로 북한의 대일 비난, 일본 검찰의 정치적 고려 수사, 조총련의 심각한 재정 악화 등을 고려해 볼 때,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토지의 경매 문제는 북·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전략적 재료로 활용될 소지도 적지 않다. 즉, 일본측의 대북 흥정 카드(bargaining chip)가 될 수 있는 것이다.

(3)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와 북·일관계

마카오의 방콕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문제가 6월 19일 해결되고, 북한이 7월 14일 2·13 합의에 따른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함에 따라,⁹² 베이징에서 7월 18~20일에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일본대표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7월 18일, 영변 핵시설 폐쇄 다음단계의 조치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하면서도, 납치문제의 해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대북 온건정책을 경계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아베 총리가 제6차 6자회담을 앞두고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하여 ‘6자회담에서의 납치문제 제기’를 강조한 만큼, 사사에 겐이치로 대표도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납치문제의 해결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부각시키려 하였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였다. 일본 대표 사사에 겐이치로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북한 대표인

⁹¹ 『뉴시스』, 2007년 7월 30일.

⁹² 한국 측이 중유 5만톤 가운데 1차분인 6,200톤을 실은 배가 7월 12일 울산항을 출발하여 북한의 선봉항에 동월 14일 도착하자, 북한은 몇 시간 후에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였고, IAEA 사찰단은 즉시 5개의 핵시설을 봉인하였다.

I
II
III
IV
V
VI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에게 양자 협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접근하였다.

이에 북한은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직전의 6자회담에서 일본을 비난하고 비토하는 태도와는 달리, 북·일 양자협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전향적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의 이튿날인 7월 19일, 사사에 겐이치로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사이에 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가 1시간 정도 이루어졌다. 북·일 양자협회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납치문제·대북 경제 및 에너지 지원·과거사 보상 등에 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⁹³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의 마지막 날인 7월 20일, 사사에 겐이치로 대표는 북·일관계 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는데, 주목할 만한 언급이다.

사사에 겐이치로 대표는 ‘북한의 일본인 문제 해명 자세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양국간 현안 해결의 진전을 위해 양국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과거 식민지 시대 보상금 문제를 협의할 의향이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⁹⁴ 이는 일본이 북한의 대일 태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느끼고 있지만,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상·타협을 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4) 7·29 참의원 선거와 북·일관계

아베정권은 7·29 참의원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7년에 접어

⁹³- 『연합뉴스』, 2007년 7월 19일.

⁹⁴- 『뉴스시스』, 2007년 7월 20일.

들면서 바로 선거전에 대비하였고, ‘아름다운 국가 일본’을 향한 155개의 공약을 제시하면서 선거전에 전력을 다하였으나,⁹⁵ 7·29 참의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지지율은 더욱더 하락하기만 하였다. 즉, 자민당의 선거 패배가 예견되었다.

마침내, 아베정권은 7·29 참의원 선거에 ‘일본판 북풍’까지 전략적 활용을 시도하며 유권자의 지지 회복을 추구하였다. 예컨대, 모리 요시로 전 총리,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 등은 7월 25일 도쿄 시내 가두연설에서 “여당이 패배하면, 즐거워하는 것은 김정일뿐”이라며 일본판 북풍의 활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7·29 참의원 선거 유세과정에서 일본 국민들은 납치문제에 대해 낮은 관심도를 나타내었고, 참의원 선거는 자민당의 역사적 대참패로 끝났다.⁹⁶

참의원 선거의 참패를 계기로 아베정권의 강력한 정국운영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고, 아울러 자민당내 대북 온건론자들도 입지가 강화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자민당내 대북 온건론자들은 북핵문제와 납치문제의 해결을 분리해 대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납치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시하는 아베정권의 경직된 대북 강경정책이 한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5) 한계속의 북·일관계 진전

7·29 참의원 선거에서의 자민당의 대참패가 일본의 대북정책의 강

⁹⁵ 아베정권은 선거공약의 당초 원안과는 달리 헌법개정보다 연금개혁을 최우선시하는 민생현안을 공약 전면에 내세웠고, 공무원제도·교육개혁 관련 법안 조속 처리 등을 통해 개혁자세를 부각시키면서 민심잡기에 주력하였다.

⁹⁶ 배정호,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7).

I
II
III
IV
V
VI

·온 양면전략으로의 노선 수정과 더불어 북·일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타나는 가운데,⁹⁷ 6자회담 북·일 국교정상화회담이 9월 5~6일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게 되었다.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그룹회의의 개최를 앞두고 아베 총리의 ‘과거 청산’ 언급, 마치무라 노부타가 일본 신임 외무장관의 유화적 발언 등이 나타났으므로, 울란바토르 북·일 실무회의는 다소 주목과 기대가 모아졌다.⁹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기관지 조선신보는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그룹회의가 시작된 직후, 아베 총리의 ‘과거 청산’ 언급 등을 거론하면서 일본의 대북 접근 방식에 변화의 조짐이 엿보인다고 평가하였다.⁹⁹

몽골의 울란바토르 북·일 국교정상화회담에서는 납치문제만을 다루었던 3월의 베트남 하노이 회의와는 달리, 과거청산과 납치문제를 병행하여 협의하였다.

북·일 양측은 납치문제와 관련하여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 하며 대립하였지만, 북한이 원하는 과거청산 문제가 협의되었으므로, 북한측 수석대표 송일호 외무성 북·일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도 일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송일호 외무성 북·일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는 과거청산과 납치문제를 병행하여 협의한 일본의 자세는 ‘건설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실무회의의 지속적 개최를 통해 국교정상화로의 로드맵 작성도 가능하다는 기대를 나타내었다.¹⁰⁰

97- 『연합뉴스』, 2007년 7월 30일.

98- 『중앙일보』, 2007년 8월 31일; 『연합뉴스』, 2007년 8월 31일.

99- 『연합뉴스』, 2007년 9월 5일.

100- 『연합뉴스』, 2007년 9월 8일; 『한겨레』, 2007년 9월 9일.

북·일 실무회의 후, 양측은 평양선언에 기초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하여 국교정상화를 조기에 실현하는데 쌍방이 성실히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울란바토르 북·일 실무회의는 별다른 진전 없이 막을 내렸지만, 파행으로 끝나지 않고, 북한의 대일 전략적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진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과거청산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배상·보상, 지원 등을 절박하게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일관계는 일본의 강·온 양면전략으로 재차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베 내각의 대북 수해지원의 무기한 연기 방침¹⁰¹에 이어 대북경제 제재 시한 재연장 방침이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등 일본 언론에 보도되면서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게 되고 북·일관계는 또 다시 불편한 관계로 전략하게 되었다.

아베 내각은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의 진상 재조사에 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재를 해제할 경우, 보수층의 반발 등 국내여론을 의식하여, 대북 경제제재 시한을 재연장하는 대북 강성전략을 취하게 되었다. 즉, 아베 내각은 울란바토르 북·일 실무회의에서 납치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진전을 없었던 점을 반영하여 2007년 10월 13일이 만기인 대북 경제제재 시한을 6개월 재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¹⁰²

즉, 북한 선적 선박의 일본 입항 전면 금지,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¹⁰¹ 『共同通信』, 2007年 9月 7日.

¹⁰² 일본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2006년 10월 6개월 기한으로 시행했던 대북경제제재를 2007년 4월에 1차 6개월 연장하였다. 아베정권은 또 다시 6개월을 연장하는 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각료회의에서 ‘실행 결정’이 이루어지면, 대북경제제재조치는 6개월 재연장 되어 적용되는데, 후쿠다 정권은 2007년 10월 대북경제제재조치의 재연장 실행을 결정하였다.

I
II
III
IV
V
VI

전면 금지, 북한 국적 보유자의 입국 원칙적 금지, 북한 관계자에 대한 사치품 수출 금지 등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6개월을 다시 연장하는 방침이 결정된 것이다.¹⁰³

이와 같은 아베 내각의 대북 경제제재 6개월 재연장 방침 결정조치에 대해, 송일호 외무성 북·일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는 조선신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강력한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었다. 송일호 외무성 북·일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는 일본의 언론보도처럼 대북 경제제재 시한이 재연장 된다면, 울란바토르 북·일 실무회의의 합의가 수포로 돌아간다고 강하게 반발하였다.¹⁰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2007년 9월 12일 돌연 총리직 사임 표명으로 북·일관계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일본인 납치피의자 가족회는 아베 총리의 사임 발표에 즉각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나타낸 반면,¹⁰⁵ 일본적십자사는 9월 13일 정부의 방침과 관계없이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의 북한 수해지원에 동참한다고 발표하였다. 즉, 일본적십자사는 아베내각이 결정한 대북 수해지원의 무기한 연기 방침과 관계없이,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의 요청에 응해 3천만 엔을 지원한다고 밝혔다.¹⁰⁶ 이는 주목되는 부분인데, 일본이 현실적 한계 속에서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계속 유지하려는 전략적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103- 『讀賣新聞』, 2007年 9月 8日.

104- 『朝鮮新報』, 2007年 9月 10日.

105- 『讀賣新聞』, 2007年 9月 12日.

106- 『朝日新聞』, 2007年 9月 14日.

VI

결론



아베 총리는 납치문제로 대북여론이 악화된 정치적 상황에서 보수 강경론자로 총재 후보 수준의 정치지도자 반열에 올라선 뒤, 고이즈미 총리의 후견과 ‘일본판 북풍’의 영향으로 ‘아베 대세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권공약으로 ‘헌법개정’¹⁰⁷을 외치며 첫 전후세대의 최연소 총리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역으로 고이즈미 정권이 남긴 ‘정책 후유증’, ‘일본판 북풍’ 등의 부담을 가져야 했고, 따라서 보수세력을 대변하며 이념지향형 정책을 추구하여야 했다. 즉, 아베정권은 민생중시 정책을 소홀히 하였고, 전후 탈피 개혁정치를 추구했으며, 납치문제에 집착한 경직된 대북정책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아베 총리는 7·29 참의원 선거에서 대참패를 하였고, 국정 운용 주도력을 상실하면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여야 했다. 즉, 아베정권은 366일 만에 침몰하였다.

아베정권에 대해서는 국내정치와 대외 및 대북정책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국내정치 차원에서 보면, 아베정권은 고이즈미 정권의 후유증인 격차사회문제, 재정재건문제, 연금기록 문제 등을 떠안게 되었으나, 민생중시정책보다 전후체제의 탈피에 역점을 둔 교육개혁, 안보개혁, 헌법개정 등을 우선시하였다. 즉, 아베정권은 전후 개혁정치 차원에서 숙원과제였던 교육기본법의 개정, 방위청의 성(省)으로의 승격,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의 성립, 주일미군재편 추진을 위

¹⁰⁷ 아베 신조가 2007년 8월에 발표한 「정권구상」에서 임기 중에 헌법 개정을 실현하는 것을 정권의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와베나베 오사무 교수는 자민당 총재후보가 경선에서 정권공약으로 헌법개정을 제시한 것은 전후 일본 정치사에서 매우 이질적이라고 지적하고, 아베 내각은 전후 내각 중에 매우 ‘획기적’인 내각이라고 평가하였다. 渡辺治, 『安部政權論』(東京: 旬報社, 2007).

I
II
III
IV
V
VI

한 특별조치법¹⁰⁸의 성립 등을 이룩하였다. 이는 보수층으로부터 일 정부분 평가받을 업적이지만, 아베정권은 ‘코드 인사’에 따른 측근들의 요직 배치, 민심과 이반된 이념 지향형 정책의 중시 등 소위 ‘관저 정치(官邸政治)’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대외정책 차원에서 보면, 아베정권은 고이즈미 정권의 대외정책 후유증인 동아시아 외교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보다 먼저 중국, 한국 등을 방문하고, 아세안 외교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나, 여전히 미·일동맹 중시의 외교기조를 유지하였다. 즉,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신중을 기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 등 동아시아 외교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일본·호주의 안보협력 강화, 미·일의 가치외교와 『자유와 번영의 호(弧)』 추구 등 미·일동맹의 강화에 보다 더 역점을 대외전략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대북정책 차원에서 보면, 아베 총리는 ‘일본판 북풍’의 부담 때문에 납치문제에 최역점을 둔 대북정책노선과 강력한 대북 제재 정책노선을 추구했다. 즉, 아베정권은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직후,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를 취함과 더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회의의 대북제재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고, 2·13가 합의가 도출되어도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납치문제에만 집착하였다. 아베정권은 현실적 한계 속에서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계속 유지하려는 전략적 노력을 다소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납치문제의 제약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아베정권의 대북정책은 정권의 보수성향의 특성, 현안에 대한 북·일간의 인식차이 등으로 인해 관계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¹⁰⁸- 2007년 5월 23일 오전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 공명 양당 등의 찬성에 의해 가결되었다. 즉, 최종적으로 성립된 것이다. 『朝日新聞』, 2007年 5月 24日.

참고문헌

1. 단행본

- 배정호.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_____. 『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서울: 나남, 2006.
- _____. 『아베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_____.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_____. 『탈냉전기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_____. 『탈냉전시대 전환기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渡辺治. 『安部政權論』. 東京: 旬報社, 2007.
- 小澤一郎. 『日本改造計劃』. 東京: 講談社, 1993.
- 安部晋三. 『美しい國へ』. 東京: 文藝春秋, 2006.
- 日本 外務省. 『2007 外交青書』.
- 日本 防衛省. 『2007 防衛白書』.
- Amitage, Richard L. and Nye, Joseph S. (etc). *The U.S.-JAPAN ALLIANCE: Getting Asia Right through 2020*. Washington: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February 2007.

2. 논문

- 박건영. “제1차 아미티지보고서(2000)와 제2차 아미티지보고서 (2007): 비교분석과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 *KNSI REPORT*. 서울: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2007.
- 배정호. “미·일·호 3각 안보연대와 일본·호주 안보공동선언의 전략적 함의.” 『국제이슈해설』. 제105호. 서울: 자유기업원, 2007. 4. 20.
- _____. “강화되는 미·일동맹과 한국의 전략대안.” 『국제문제연구』. 8월호, 2006.
- _____. “21세기 미·일동맹의 강화와 한반도.” 『국제문제연구』. 제6권 3호. 2006.
- 麻生太郎. “自由と繁榮の弧をつくる擴がる日本外交の地平.” 2006. 11. 30.
- 鈴木美勝. “新外交戰略, 自由と繁榮の弧.” 『世界週報』. 2006. 12. 26.
- _____. “日米價值外交とアーミテージ報告Ⅱ.” 『世界週報』. 2007. 3. 27.
- “第165回国會における安部内閣總理大臣所信表明演說.” 2006. 9. 29.

3. 기타자료

- 『뉴시스』.
『동아일보』.
『서울신문』.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조선신보』.

『共同通信』.

『論座』.

『讀賣新聞』.

『東京新聞』.

『産經新聞』.

『世界週報』.

『日本經濟新聞』.

『朝日新聞』.

『毎日新聞』.

연구총서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발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화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군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2007-13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저	5,000원
2007-15(1)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10,000원
2007-15(11)-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3	東北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11)-4	東北亞区域合作的新联系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문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외	공저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학술회의총서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성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9,000원

협동연구총서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04-01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I):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7-10-01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9,000원
2007-11-03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2 (2007)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i>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	--------

연례정세보고서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운,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운,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망: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운,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최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과와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운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운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운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민국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근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출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객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열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근,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2007-08	북핵 폐기를 위한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출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제1호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Studies Series

-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우편번호: 142-728)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